광복 80년, 분단 80년
여성과 한반도평화 국회토론회

일시 |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부 | 사회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기조발제 | 여성이 이룬 빛의 혁명, 이제 평화 이루기의 길로
한정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발표 1 | 젠더화된 권위와 소통의 이중코드 : 북한 여성 권력자의 언어를 중심으로
윤보영(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발표 2 | 미군의 주둔과 여성(기지촌문제를 중심으로)
최희신(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발표 3 | 윤석열탄핵광장의 의미와 2030여성들의 도전
유하영(두레방 자원활동가)

발표 4 | 끝나지 않은 식민지·전쟁범죄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2부 | 사회 김은진(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주제토론 및 종합토론

이은정(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상임대표)
노주현(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박수미(두레방 활동가)
강새봄(진보대학생넷 정책위원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공동주최 | 이재정의원, 이수진의원, 이용선의원, 권향엽의원, 임미애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생의원(조국혁신당), 손솔의원(진보당)

공동주관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국회토론회 기조발제

여성이 이룬 빛의 혁명, 이제 평화 이루기의 길로

한정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서울대 역사학부 명예교수)

1. 머리말

2025년은 광복 80주년과 2차 대전 종전 80주년인 동시에 분단 80주년, 6.25 전쟁[1]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현대사의 현미경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대자면 올해는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꼭 4반세기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로부터의 광복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 남북 간의 유혈 대결,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로 만들어냈던 6.15 선언. 이 모든 격동적 사건들을 기념하는 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이러한 해에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분단의 극복과 내적 · 외적 평화 수립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선언하고자 여성단체, 여성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민주주의는 적지 않게 흔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선도국이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미국은 준파시즘적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지, 이후로도 계속되어 미국을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끌어내리게 될지, 그 장기지속적인 과정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 문제에서 세계의 근심거리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른바 strong man들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바로 지난 겨울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한 위험과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암담한 상황 속에서 탁월한 창의성을 발현하고 찬란한 빛을 찾아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시민들의 위기의식을 신새벽의 칼바람처럼 일깨웠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를 가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철렁철렁하는 심장 고동과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회를 향해서도, 민주주의는 취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합된 시민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수호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는 세계의 시민들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의 모범이 되고 있듯 평화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참혹한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군사주의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쟁 무기와 기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은 너무나 참혹하여 언론보도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또 한 번의 제노사이드를 목격하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1) 최근 한국에서는 1950.6.25.~1953.7.27.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한국전쟁이란 명칭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전쟁을 당분간 6.25 전쟁이라 부르기로 한다.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각국의 군비는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경쟁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한반도 역시 그같은 경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서광이 비치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경색되더니 지난 정부에 이르러서는 북한 최고통치자의 입에서 남북은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세계 평화의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대국에 의해 타의로 분단된 후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한반도가 자신의 의지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낸다면 갈가리 찢겨 있는 세계 구성원들 앞에 평화의 수립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구성원들이 세계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적 평화 국가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로써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세계 평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도 평화도 감염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수록 감염력은 더욱 커집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여성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주체, 평화 수립의 주체로 스스로 호명합니다. 여성들은 지난 겨울 내란과 계엄의 상황 속에서 혹한과 눈보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계엄철폐를 외쳤고 그 덕분에 한국은 실제로 계엄을 넘어서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빛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군사력을 동원한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듯이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수립, 대내 · 대외적 군사주의 극복에도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2. 평화로 나아가는 길

2-1 남북 여성교류를 통한 남북 대화 촉진

지난 정부 시기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습니다. 적어도 6.15 선언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은 사라졌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만 2023년 12월 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과 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선언함에 따라 그 진의에 대한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인 듯,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엄청난 충격이 몰아닥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의 전쟁 도발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공분을 사 마땅한 일입니다만 두 국가론 자체는 경악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이미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입니다. 각기 정부와, 군대와,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두 국가일 뿐입니다.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 정부는 동·서독은 두 국가일 뿐 아니라 두 민족이니 통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까지 일갈했지만, **'양국(兩國)'**은 비적대 상태에서 꾸준히 교류하였고 국제정세가 유리해졌을 때 기회를 절묘하게 포착하여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고 북한 지도부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적대 상태를 비적대 상태로 전환시키고 꾸준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하며 서로 다가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양독 여성의 상호교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독에서는 시민사회의 주요 여성 지도자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굳건히 연대하였고 서독 여성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한 지원이라는 대의로 동독 여성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독 시민단체의 대표자였던 베르벨 볼라이와 서독 녹색당 지도자였던 페트라 켈리의 교류는 그 정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동서독 여성들의 교류가 동서독 통일의 큰 물꼬를 텄다고 감히 말합니다.

우리 한반도 여성들도 이러한 역할을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이러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분단과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 민간교류의 물길을 처음으로 연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1991년 처음으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들, 그리고 일본의 여성 지도자들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 그리고 도쿄를 오가며 연 여성 평화회의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10항쟁을 겪으며 민중, 민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다져온 한국 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토론회에 참가하여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일제의 침략 및 식민 지배의 청산과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 군축 문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평화 조건을 탐색하였습니다.[2] 제1회 대회는 1991년 일본여성단체들이 조직하여 도쿄와 코베에서 열렸는데, 남측에서는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선생님이, 북측에서는 여운형 선생의 따님인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회장을 비롯하여 정명순, 리연화 대표가, 일본에서는 사회당 당수인 도이 다카코 대표를 비롯한 여러 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2회 대회는 서울에서 1991년 11월에 열렸는데, 일본 대표들 외에 북측에서도 무려 열한 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북한여성들이 DMZ를 넘어 남쪽 땅을 밟은" 역사적 대회였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지 한 달 만인 1991년 11월에 남북관계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곧이어 1992년 2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발표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3회 대회는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결의가 있었는데 "一)미래 평화를 위해서는 아세아에서 핵과 군사 대국에 의한 위험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一)남,북,일 여성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지배와 역사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인간으로서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 一)가능한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에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긴급한 문제다."등등이 결의되었습니다.[3] 지금 상황에서 보아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절실한 요청들입니다. 그리고 4회 대회는 다시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1993년 북핵 위기 발발로 5차 회담이 열리지 못하였고 이 토론회는 이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한의 여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을 논의했다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날이 다시 오리라는 것은 마냥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여성교류는 상황을 타개하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출발점으로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대화에 앞서 여성들이 만나는 것이지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3회 평양 대회에서 이효재 선생은 민족 화해에 기여할 '여성의 평화지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가진 능력,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을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과 개방성을 확대할 때 민족 공동체의 화해와 단결은 앞당겨지며, 따라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새로운 인간,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는 노력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입니다.[4]

저는 이를 '여성의 평화 능력'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는 평화와 관련하여 굳이 젠더 구분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남성이 전쟁을 하고 여성이 이를 수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법칙이

2) 이현숙,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성과와 과제」,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자료집 (서울, 2021), 5쪽.
3) 같은 글, 8쪽.
4) 같은 글, 9쪽.

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물학적 원리 아래서는 인류는 영원히 전쟁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성이 평화의 능력을 확장하여 인간이, 세계가, 전 세계의 시민들이 폭력에서 대화로, 유혈과 갈등에서 평화로 점차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길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효재 선생은 또한 통일을 말하되 내외부적 억압을 수반하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대외적인 종속성이 극복된 상태의 통일을 말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조건이 마련될 때 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단결도 더 잘 이뤄질 수 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권력과 물질의 공평한 분배와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권력과 물질의 분배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5] 저는 이것이 내적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자기 변용과 상호성장을 통해 화해와 통일이라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35년 전의 토론회를 돌이켜 보고 길게 반추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여성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겨 보기 위함이며 우리도 이분들처럼 남북 대화의 문을 열고 동아시아 평화의 길을 닦자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6.15 선언 이후 한국의 여성대표단은 여러 차례 북을 방문하여 북한 측 인사들과 교류하였으며 북측 여성들도 남측을 방문하여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확대해 가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과 문재인 전대통령의 평양· 백두산 방문 이후로는 여성계도 본격적으로 북을 방문하여 남북 화해를 촉진하게 되리라는 희망에 마음 설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여성들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을 척도로 해서 북한 여성의 삶을 일방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제 다음에 발표하실 윤보영 박사의 연구도 그 한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교류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던 연구자들 · 활동가들이 두어 해 전부터 그 연구 · 활동의 장을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암담한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자들, 활동가들은 이를 “탈북한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북한학 전공자들께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침체 이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만큼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민화협 공동의장단의 일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면담하였을 때 남북 여성 교류를 지원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빛의 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한국 여성이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감히 가지고자 합니다. 그 용기와 의지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범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 수립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도 정부도 이 의지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2. 군사주의의 극복: 무기수출, 기지촌, 동두천 성병 관리소

여성이 이루는 평화를 말할 때 우리는 군사주의 극복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무기수출 문제입니다. 2024년 한국은 방위산업 세계 5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6] 그리고 2020~24년 무기수출 세계 10위 자리에 올랐으며,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

5) 같은 곳.

6) 김타영, 「한국방산 세계 5위강국으로 도약」, 포춘 코리아 디지털 2024.07.23. https://share.google/j53oE6L0HBRIOIOki(접속일: 2025.08.07.)

기 공급자가 되었다"는 CNN 방송의 평가도 있었습니다.[7]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비증강과 방위산업 증대에는 사회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그동안 형성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전쟁 억지를 위해 한미동맹에 의지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국가에 대량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 첨단성을 자랑하며 소위 "국뽕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무기 전시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 같은 우회로를 거치기는 할망정 사실상 공공연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소리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의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약 227억원,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액은 84억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차· 장갑차류의 수출 증대는 괄목할 만합니다.[8] 전쟁하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곧 그 무기로 교전국의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을 죽이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자지구의 참상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한국인이 만든 무기가 가자지구의 어린이를 살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남의 살갗을 찢고 뼈를 부수도록 지원하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해법이 아직 국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장론을 펴는 것은 긴장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8월 6일은 히로시마 원폭투하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합천에서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9] 원폭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공간이자 원폭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가고 있는 공간인 동아시아에서 핵무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남북한 공히 핵무장 국가로 대치하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 동아시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길에 여성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군사주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억압, 성적 억압을 수반합니다. 지난 5월 하순 서울에서는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국제여성네트워크(IWNAM)'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여성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만, 급선무 중의 하나로 지적된 것은 외국군대 기지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기지촌이 형성됩니다. 여성은 **'군대의 군수물자'**로 동원되어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우리 현대사도 이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6.25 전쟁 시기 한국군 위안부도 존재하였습니다만[10]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규모도 큰 집단으로서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 착취의 상징이 된 것이 미군 위안부의 존재입니다. 국가의 장려로 기지촌에서 생활하였으나 연세가 든 후 일반 사회로 편입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아예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의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이와 관련하여 한 의미 있는 승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즉 기지촌 여성들과 활동가들의 투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

7) 이승녕, 「韓, 무기수출 세계 10위에 올랐다… 무기 수입 1위는 이곳」. 중앙일보 2025.03.10. https://share.google/VU3T6U84U1NqnPJDY(접속일: 2025.08.07.); 한예슬, 「韓, 무기수출 규모 세계 10위…. "美 동맹국들 핵심공급자 부상」, 중앙일보 2025. 07. 13. https://share.google/1kbuBPcPII28QDyD4(접속일: 2025.08.07.)

8) 신다은,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한겨레 21 제1541호(2024.12.02.)

9) 「"80년전 그날의 비극 잊지 않겠습니다.」, 경남신문 2025.08.06. https://share.google/L63I8uJoPiUNxi8i6 (검색일: 2025.08.07.)

10)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모』(선인, 2020)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안김정애 대표님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4년 시작된 소송은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리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11] 그동안 기지촌 여성들이 당해왔던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해 작은 물적 ·정신적 보상이라도 약속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는 어떠할지 예측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동두천의 옛 성병 관리소의 보존은 군사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주둔지에서는 병사들에게 성병 없는 건강한 성매매 여성의 섹슈엘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성병 관리소가 운영되어 왔고 그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전 세계에서 동두천 성병 관리소가 유일합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가득 들어찬 극히 황량하고 음울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은 여성에 대한 억압, 인권유린의 현장으로서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이 건물을 보존하여 역사적 기억과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자 하는 공동대책위원회와 동두천 시민들, 이들과 연대하는 바깥 사람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희신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그 구체적 진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경제적 · 문화적 도약을 위해 어디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자기성찰의 시간이 된 것이지요. 동두천의 옛 성병 관리소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 제국주의 전쟁의 여성착취 과거사 해결

2025년은 한일 협정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협정체결 당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남성 정치인들이 서둘러서 입씻듯 체결한 이 협정은 한일병합조약(합방조약)의 효력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이 각기 달리 해석하게끔 대단히 모호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거사 현안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성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이를 알게 된 다른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더불어 한일 간 최대의 과거사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용감히 싸워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온 세상에 공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여성들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전시 성폭력, 여성 억압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2차 대전 시기 유럽에도 나치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나치 군대는 프랑스뿐 아니라 동부 중부 유럽 각 사회 등 자(自)부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명령에 따라 위안소를 설치하였고 각 지역의 여성들을 인종 불문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습니다. 단 자국 여성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나치는 인종주의적 장벽을 세워 유대인과의 성적 접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한 정권이었지만 나치 군대는 그 같은 인종 격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 운영한 위안소 혹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유대인 여성들까지 위안부로 삼거나 그냥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12] 전쟁이 있는 곳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있음을 일본군 위안부와 나치군

---

11) 백소아, 「'기지촌 미군 위안부'국가배상책임 인정.... 터져나온 눈물」, 한겨레 2022. 09. 29. https://share.google/t90Iuv9IXVC35IJIA (검색일:2025.08.07.); 하주희,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을 돌아보며」, 『페미니즘 연구』 제 23권 제1호 83~103쪽.

12) Jacob Apenszlak(ed.), The Black Book of Polish Jewry(New York: Roy Publishers, 1943), 25-28쪽; Sinnreich, "Rape of Jewish Women during the Holocost", S. M. Hedgepeth & R. G. Saidel(eds), *Sexual Violence against Jewish Women during the Holocost*(Waltham, MAssachusetts: Brandeis University

유대인 여성 성착취보다 더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시기 폴란드 여성들에 대한 나치 군대의 성착취 문제도 21세기에 들어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연구한 한 폴란드 언론인은 중국과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개된 것에 자극을 받아 폴란드에서도 여성에 대한 나치 군대의 성폭력 문제가 연구되기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13] 저는 폴란드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고 "한국 여성들 참 대단하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해자 사회가 감출 수도 없고 얼버무릴 수도 없습니다. 이를 전쟁과 군대에 의한 여성 착취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고 이에 맞서 여성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나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전시 여성 상대 성폭력의 철저한 근절을 세계 앞에 다짐받는 작업은 이제 한국의 여성 평화운동이 한 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한국을 이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한 선도사회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한일 협정으로 은폐해버리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그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때 이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듯이 보이다가 보수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침 위안부 문제는 남북 대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남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유합니다.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선례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때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남북 여성들의 협력이 논의되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남북 대화의 진전을 위한 최상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 앞에 여성에 대한 전쟁 성폭력과 착취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주요한 선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실현

전쟁에 맞서는 여성의 평화 노력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입니다.[14] 이는 분쟁-갈등의 예방, 해결, 평화구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한 최초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서, 2000년에 1325호가 통과되었고 그 후 2008년부터 총 아홉 개의 후속 결의도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 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엔은 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무력 분쟁지역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 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 결의에서는 무력 분쟁으로 인한 위기가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여성의 필요를 반영해야 하며, 무력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참여기회를 가지도록 젠더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는 평화협상, 안보 부문 개혁 및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15]

Press, 2010).

13) Cezary Gmyz, "Seksualne Niewolnice III Reczy", *W Prost* 24. 22 kwietnia 2007(2007년 4월 27일).

14) 영문 명칭은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이고 약칭 WPS S/RES/1325이다. 참고로 1325 결의를 일부 정부부처를 비롯해서 일각에서 1325 결의안(決議案)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결의안보다는 결의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결의안은 통과되기 이전 제안 상태의 문건을 말하기 때문이다. 1325 결의는 정식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案)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여성 평화운동계가 이 결의의 중요성을 꾸준히 상기시켜 왔고, 유엔의 권고에 따라 1325호 결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노력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여성은 전쟁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로 그치지 않고 분단극복과 평화 수립의 주체이자 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과정이 성평등 실현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하며. 남북 여성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여성 평화운동의 요구가 있다면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협상에서 여성 대표의 몫을 반드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무력분쟁의 피해자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평화 능력을 가진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평화협상에서도 여성은 당연히 절반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3. 기념을 넘어 미래로

우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 6.25 전쟁 발발 75주년, 6.15 선언 25주년을 맞아 여성의 이름으로 평화 이루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아니 여성이 어떻게 평화 수립을 선도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역사적 사건이 몇 주년이 되었다고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역사를 살아내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평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념의 해에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무력 분쟁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수록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은 더 커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인들 분단과 전쟁을 좋아할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러시아를 지원하는 용병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국가 동맹 정책의 최전선에서 돈벌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사한 북한 장병의 어머니들, 아내들, 딸들은 가족의 죽음을 영광스러워하고 이를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인명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 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은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평화를 위한 제안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분단 상황이 만들어놓은 대립 속에서 사소한 충돌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무력 충돌이나 적대관계 또한 남북한 구성원들 중 이성 있는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은 평화의 위기를 평화를 위한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의지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하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은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저지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극우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재확립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030 여성들이 평화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의 하나로 남북한 2030 청년여성들의 교류와 축제, 청년여성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앞에서 소개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남북 여성 교류는 주로 원로 혹은 중견 여성 지도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30 여성들이 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회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젊은

15) WPS SRES1325.pdf - https://share.google/pE9W6Zt1svt07hjBQ; 김정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과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2022. 6. 10.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 협동과정 여성평화안보 의제 연속 집담회 강의안)

세대 여성들의 고민을 나누고 같이 노래하며 우정을 쌓고 평화를 위해 밤새워 이야기해보면 미래 세대가 원하는 화해와 통일의 윤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 인간적 교감 속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 '우리 친구들과는 절대 전쟁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져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2030 청년 여성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는 여성 평화농장의 조성과 운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전선 부근에 싼 임대료로, 혹은 무상으로 땅을 빌려 그곳에서 쌀도 채소도 과일도 재배하는 것입니다. 재배되는 농작물을 재개통될 남북 교류열차편으로 북한에도 보내고 또 북한 농작물 씨앗을 받아와 농장에서 재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먹고사니즘의 해결에도 기여하고 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경제가 실현되는 꿈을 꾸십시다. 남북 여성들이 교류하고 같은 농작물을 먹으면서 군사주의와 식민 지배로 인한 여성 억압의 잔재를 걷어내고 함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꿈을 꾸십시다.

작은 발걸음 속에서 평화를 다지면서 '2025년 이후 한반도 여성들이 다시 한번 평화 수립의 주체가 되었다'고 후대 역사학자들이 기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십시다.

젠더화된 권위와 소통의 이중코드: 북한여성권력자의 언어를 중심으로

윤보영(한국여성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며

2023년 연말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남한의 역대 정부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기조로 사실상의 북한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음을 비판하며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에 고착"되었다고 현실을 평가한 바 있다.[16] 김정은은 "조선 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명백히 하건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17]라고 윤석열 정부의 전쟁도발에 대해 경고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18] 이후 7월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로 "실종된 평화를 회복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고 정책의 대전환을 공언하여 남북관계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19]

그러나 2025년 7월 28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남한을 향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며 남한을 향해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개의치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20] 정동영 장관에게도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

16)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2.31.6-7면.
17)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로동신문』, 2024.1.16.5면. 6면.
18)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URL: policy.nec.go.kr/, 검색일: 2025.7.1.)
19) 정동영, "제44대 통일부장관 취임사," 2025.7.25. 통일부 홈페이지, (URL: www.unikorea.go.kr/unikorea/news/uni_news/?boardId=bbs_0000000000000164&mode=view&searchCondition=&searchKeyword=&cntId=326&category=, 검색일: 2025.8.4.)
20) 같은 날 미국을 향해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에게도 조미접촉을 꿈꾸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은근한 여지를 남겨둔 것과 온도차이가 있다. 김여정,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5.7.28.(URL: kcna.kp/kp/article/q/65e93d8a71e2fc200437c1459d7e1508d17d7815f676b7faca5260ade87fb67aaf6bdd3c8ccccc76f771c69dc52123fd.kcmsf, 검색일: 2025.7.29.)

계의 복원 운운하며"하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취임사에 대한 응답을 했다.

이 담화에서 김여정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했던 기간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되어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하고 현실 모순적인 기성개념까지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었다"며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50일 동안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력사의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통일, 평화, 교류협력이라는 "꿈꾸었던 동화의 나라와 작별"해야 하는 것일까.[21]

대통령실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지난 몇 년 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으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나가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필요한 행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취해나가야 하는 것일까?[22]

2011년 12월 김정일 추도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여정은 김정은의 다른 남성 형제들과는 다르게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로 김여정이 여성이어서 "권력을 다툴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측되었고[23] 김정은의 공식행사에서 '발견'되며 남한의 언론에서 '천방지축'이라며 현실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24]

김여정은 2018년 2월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인솔하며 남한에 방문했음에도 그녀의 공식적인 지위와 언어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지 가늠하는 '관찰'의 시선을 받았다.[25] 외신도 북한의 '공주'가 남한에 왔다며 김여정은 태생에 의해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교적이고 위계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 북한인만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26]

---

21) 페터 한트케 지음, 윤용호 옮김, 『꿈꾸었던 동화의 나라와 작별』, (서울: 종문화사, 2022).
22) 직접 인용은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KBS뉴스』, 2025.8.2., (URL: 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9987&ref=A, 검색일: 2025.8.8.)
23) 김지성, "김정은 형제들은 어디에.. 김여정만 공개, 왜?" 『SBS』, 2011.12.24. 손제민, "끝까지 안보인 김평일, 정남, 정철… 남자 친족들 '의도적 배제,'" 『경향신문』, 2011.12.28.
24) 홍상희, "김정은 공식행사 '천방지축' 여성.. 김여정", 『YTN』, 2012.8.7., JTBC 방송뉴스팀, "김정은 천방지축 여동생 김여정, '포스트 김경희' 되나?", 『JTBC뉴스』, 2013.12.16., 채널A,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천방지축에서 실세로 급부상," 『채널A』, 2014.3.10., 송원형, "김정은 열병식 연설 도중 주석단 뒤에서 '천방지축' 김여정, 또 자유분방한 '돌발행동'," 『조선일보』, 2015.10.11.
25) 오대일, "김여정 당당한 걸음걸이," 『뉴스1』, 2018.2.9. 김현상, "서로 자리 양보한 북 김영남, 김여정," 『서울경제』, 2018.2.9.
26) Anna Fifield, "Who is Kim Yo Jong? Here's what we know about the North Korean 'princess.'" 『The Washington Post』, 2018.2.8. (URL: 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8/02/08/who-is-kim-yo-jong-heres-what-we-know-about-the-north-korean-princess/)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었고, 같은 해 6월 남북미 정상회담 역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이 난 이후 2020년 3월부터 김여정은 2023년 7월까지 34번의 담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남북관련 역할과 발언의 빈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담화에 담긴 의견이 "원색적 비난"이라는 점만 주목될 뿐, 그의 언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녀의 언어를 남한을 향한 북한의 공식 의사로 평가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의사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김여정 담화에 대해 번번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보다 중요도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 청와대의 간략한 입장의 맥락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27)]

남북관계는 반복적인 대화 재개와 단절을 경험해 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언어 구조와 감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북한의 담화는 외형상 강경하고 감정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고 실속을 지키려는 이중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 담당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김여정의 언어에도 이러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당사자로 그의 지위와 활동은 중요하게 해제되기 보다는 감성적 언어로만 받아들여진다. 이에 이 글은 김여정의 발화에 담긴 남한을 향한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의 사회적 맥락에 기반을 두고 해석함으로써 남한 정부가 보다 정교하고 감수성 있는 대북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 김여정의 언어를 해제하기

김여정은 2022년 8월 18일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와 비난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시기 2020년 3월 3일 북한 방사포에 대한 청와대 훈련 중단 요구 담화를 시작으로 19번의 담화를 발표했다.[28)] 그 첫 번째 시작인 2020년 6월 13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남한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29)] 담화 발표 3일 후인 6월 16인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장 문제시된 담화는 다음 날인 6월 17일 문재인대통령의 6.15 기념행사 연설에 대한 응답이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을 구구하게 늘어놓았다"며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

27) 김여정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Jed Lea-Henry, "The Rise of Kim Yo-Jong in the North Korean Regime," Strategic Analysis Vol. 43, No. 2(April 2019), pp.138-145; Anna Fifield, The Great Successor: The Divinely Perfect Destiny of Brilliant Comrade Kim Jong Un (New York: Public Affairs, 2019); Lee Chung Min, The Hermit King: The Dangerous Game of Kim Jong Un (New York: All Points Books, 2019); 박용한·곽은경, "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전략연구□ 제29권 1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0), pp.309-338; 오경섭,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Online Series□ CO 20-12(통일연구원, 2020); 홍민,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Online Series□ CO 22-09(통일연구원, 2022). 김종원, "북한 김여정 담화 분석," INSS 전략보고, 199(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박은혜, 『북한정치에서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Sung yoon Lee, 『The Sister』, Macmillan, 2023. 직접 인용은 김종원의 글.

28) 첫 번째 담화는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한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여정,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선중앙통신, 2020.3.3.

29) 김여정,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6.4.

대책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혐오감을 금할 수 없음을 표현했다.

북한을 비난하는 삐라살포가 계속되고 그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음에도 재발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미사여구**"로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라도 향하는 강물처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시늉**"을 했다는 점에 분노한다는 것이다.[30]

김여정의 담화는 원색적인 비난의 단어와 왜 비난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난의 단어는 김여정 개인만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을까? 북한 사회의 맥락에서 살펴보자. 북한은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주의 사회이다. 규범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강조하며 이를 '인민성'이라고 표현한다.[31] 북한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인민성을 가지고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의 일원 하나하나가 북한이 처한 상황과 국제관계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것을 '인민적 사업작풍'이라고 표현한다. 공산주의 혁명의 과정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32]

인민적 사업 작풍, 그러니까 인민을 위할 줄 아는 리더의 사업 태도에서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이다. 김일성은 지도자의 언어, 정책의 언어가 인민성에 기반을 두고 인민이 알기 쉽게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이든 대중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통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말과 글의 표현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33]

듣는 이가 알아듣든 말든 어려운 말로 멋을 부리면서 말하는 것은 인민을 위한 태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34] 통속이라는 단어가 남한에서는 "세상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 대단치 않은 것,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일"의 의미로 사용됨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현실에

---

30) 김여정,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6.4.
31) 인민성, 사회과학출판사,『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723.
32) 인민적사업작풍, 사회과학출판사,『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723.
33) 통속성, 통속적, 사회과학출판사 편,『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1232.
34) 통속성을 갖춰야 함에 대한 김일성의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설명은 그의 연설에서 계속된다. 사업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리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야 알아듣건 말건 외래어나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교양사업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여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의식수준이 어리니 농민청년들을 모아놓고 부르죠아 사회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트가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느니 쏘베트를 세워야 한다느니,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멋을 부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선전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모였던 농민청년들은 "그 청년 참 미친 사람이로군 조선말도 몰라서 외국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선혁명을 한다고 야단인가. 온종일 들어보아야 조선독립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김일성, "공청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왕청에서 진행된 공창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33년 3월 27일,"『김일성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81. 사업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군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만일 군중 앞에서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선전한다면 인민들은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선전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인민들이 늘 쓰는 쉬운 말로 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게 선전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건국사업에서 인테리들 앞에 나서는 과업, 평양시내 교원,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45년 11월 17일,"『김일성전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88.

서 실천하지 못함에도 전달되는 추상적이고 아름답기만 한 언어에 대한 김여정의 혐오를 북한사회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35]

인민성,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태도는 단순히 쉬운 언어로 정책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찾아가서, 대중이 알아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의 요구를 표현하며, 해결하며, 대중과 같은 의복을 입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또한 대중을 가르쳐주는" 것이다.[36] 북한의 지도자는 담화, 보고, 집회에서 연설, 신문, 서적, 팸플릿, 라디오, 영화 등을 통해 인민에게 자신의 정책을 아주 쉬운 용어로 즉 통속적인 언어, 인민의 언어로 전달하고 또한 그들의 요구를 표현할 의무를 갖는다.[37] 그 때문에 북한 지도자의 언어는 특히 남한을 위시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의 청중은 단순히 상대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함께 듣는 북한의 인민이 포함된, 인민의 요구가 담겨있는 언어로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38]

김여정은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남조선 당국자는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 선언에 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8천만 겨레 앞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공언한 당사자로서 북남관계가 잘되든 못 되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입장에 서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임에도 "북남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결패 있게 내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라고 비판했다.[39]

이후 2022년 4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을 대표한다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선제타격을 운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라고 경고한 담화까지 김여정은 남한정부가 남북 사이에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지나 이재명 정부를 향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2024년 연초 김정은이 내린 결정의 기조에 따라,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날 것을 일관성 있게 요구했다.[40] 그러나 김여정의 담화는 "더 달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남한이 가진

35) 통속, 『표준국어대사전』, (URL: o.dict.naver.com/#/entry/koko/0e5d9157279f4b64b501ab210430c565, 검색일: 2025.8.8.)

36)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5월 24일," 『김일성전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25-426.

37) 북한의 단어 통속은 러시아어로 인기, 접근성을 뜻하는 популярность, общедоступность.로 번역된다. Мазур Юрий Нинолаевич, Моздынов Винтор Михайлович,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М.』,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1962), 428.

38) 이러한 강조는 김일성만의 언어가 아니다. 모택동은 우리 당의 모든 실제 사업에 있어서 무릎 올바른 지도는 대중 속으로부터 나와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의견(분산적인, 체계없는 의견)을 집중하고(연구를 거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으로 되게 하여) 그것을 다시 대중 속에서 선전, 해석하여 대중의 의견으로 되게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지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며 대중의 행동 중에서 이런 의견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 다시 대중 속에서 집중하고 그것을 또 대중 속에서 견지한다. 이와 같이 끝없이 순환함으로써 번마다 더 정확하여 지고 더 생동하여지며 더 풍부하여지게 된다. 이것이 곧 맑스주의적 인식론이다. 모택동, "지도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943년 6월 1일," 『모택동 선집 3』, (북경: 민족출판사, 1967), 1312.

39) 김여정,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6.17.

40) 같은 날 미국을 향해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에게도 조미접촉을 꿈꾸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은근한 여지를 남겨둔 것과 온도차이가 있다. 김여정,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

북한에 대한 생각과 북한여성의 지위 없음에 대한 관념을 반복하고 있다.[41]

Ⅲ.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감각하기 위해 1990년대 남북여성의 만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전신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이후 반전평화운동, 방위비삭감 캠페인, 군사주의와 여성 등의 문제를 다뤄오고 있다. 1991년 남북한과 일본 여성이 교류한 모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한국 이우정·이효재·윤정옥 대표, 북한 여연구 대표, 일본 시미즈 스미꼬 상원의원 대표)에서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은 한국측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도쿄, 서울, 평양, 도쿄를 오가며 1994년까지 4차에 걸쳐 연인원 약 2천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여성들은 분단의 질곡 안에서 살아온 민중의 고난과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이효재), 평화문제를 남성들에게 맡기지 말고 여성들이 힘을 합하여 아시아에 평화를 세워나가야 한다며 한반도를 비핵화지대로 만들 것을 호소했다(여연구). 또한 남북 분단에 일본의 식민지배의 책임이 있음을 마음 깊이 재인식해야 함을 이야기했다(시미즈 스미꼬). 남한의 대표자들은 학자, 운동가로 민간교류를 통한 평화구축에 집중하였는데 반해 북한의 대표자들은 정치적 지위를 보유한 이들로 남북과 해외 여성단체의 협의기구로 가칭 "민족통일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공식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남한 대표자들을 긴장하게 하기도 했다.[42]

토론회에서 남한의 여성은 가부장제도가 제도로서는 모습을 감추었으나 문화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군사주의 문화를 남북의 여성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며 남성에게만 허용되는 정치적·경제적 특권에 접근하려 했던 반면, 북한의 여성은 북한은 1946년 남녀평등법령의 발표 이후 이러한 특권의 불평등한 분배를 만들고 정당화해온 근본적인 시스템 그 자체가 분쇄되었음을 강조했다.[43]

북한은 1948년 9월 정식국가를 수립하기 이전, 임시정부였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시기인 1946년 토지개혁, 노동법령, 남녀평등권의 중요한 3개 법령을 발표하며,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되기 전까지 "노력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지키며 계속 혁명을 해야 함이 강조해왔다. "노력한 만큼 분배받는" 것은 북한의 절대 원칙이며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적게 갖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제도의 우월성이 사회주의 북한에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44]

전히 벗어났다,"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5.7.28.(URL: kcna.kp/kp/article/q/65e93d8a71e2fc200437c1459d7e1508d17d7815f676b7faca5260ade87fb67aaf6bdd3c8ccccc76f771c69dc52123fd.kcmsf, 검색일: 2025.7.29.)

4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세현, 이재명 비판한 김여정? 속뜻은 '더 달라'"『노컷뉴스』, 2025.7.30.

42) 김윤옥, "90년대 남북여성교류의 첫 물꼬, 서울 평양토론회 회고와 의의,"『여성과평화』7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2), 21-37.

43)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 여성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크리스틴 R. 고드시 지음, 이푸른 옮김,『레드 발키리-걸보스 페미니즘에 도전한 사회주의 여전사들』, (파주: 틈새의 시간, 2022).

44) 강장룡,『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그러나 1990년대 국제환경은 급변하였다. 소련은 해체되었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지만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북한의 정책도 변화가 시도되었다. 과거에는 주어진 규율을 지키며 능력만큼 일해서 의무를 수행하면 의식주는 국가가 배급제도를 통해 필요한 만큼 책임져 준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인민 모두가 각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국가를 수호해야 하며 동시에 각자의 생활은 자력갱생으로 알아서 꾸려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북한정부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인민은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완수하고 동시에 자신의 생활을 알아서 책임지는 것으로 규범이 이동했다. 국가가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인민 역시 국가에게 방도를 묻지 말고 자력갱생해야 하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조밀한 규율 아래 운영되어야 하는 공장, 기업소와 같은 하부단위도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치부문이 경제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결과 역시 정치부문에게 물을 수 있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경제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대담하게 작전하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모범이 되는 것은 군인이다. 조국의 승리 혹은 패배가 결정되는 전장에서 군인은 식사시간과 근무시간을 지켜가며 싸우거나 할당량을 조금 줄여달라고 말할 겨를이 없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전력을 다해 싸우고 맡겨진 의무를 완수한다. 모든 인민도 북한을 고립하고 압살하려는 외부의 책동에 맞서기 위해 군인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45)]

북한의 여러 직군에 망라된 공식월급을 보면 가장 적은 월급과 가장 큰 월급은 군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병사의 월급 700원과 소장 6,670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쌀1kg이 5,000원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월급은 쌀 1kg을 살 수 있거나 혹은 부족한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뿐 임금과 물가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46)] 2인 가족이 사는데 소요되는 현실생활비가 44만 원정도인 것을 생각하면[47)] 노동해야 하는 의무는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공식월급과 배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민은 각자 공식적인 노동공간 안에서 공식/비공식적 방법으로 공식월급 이 외의 이윤을 창출하거나, 비공식적 노동을 과외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48)]

---

45) “시대는 발전하고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환경은 달라졌다.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일군들은 새로운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낡은 사상관점과 수공적인 사고방식, 쬐쬐한 사업기풍을 가지고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일 크게 전개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생략)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지금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 있으며 강력한 군대와 일심단결이 있다. 인민대중의 투쟁기세도 좋다. 문제는 일군들의 사상적 각오와 투쟁기풍에 달려있다.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태도, 기풍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에 따라 경제강국건설의 성패가 좌우된다.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인민군 지위관들의 투쟁정신과 사업기풍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생략) 인민군지휘관들은 누가 무엇을 가져다주거나 조건을 갖추어 줄 것을 바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군인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제기된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야 만다.”(서재영 외 2005: 335-337).

46) 윤승비,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7) 장혜원은 2018년 북한에서 2인 가족이 사는 데는 드는 생활비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함경북도, 강원도, 평안북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 3명을 취재하여 이들의 한 달 생활비가 44만 원 정도라고 전한 바 있다. 장혜원, “북한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매일경제신문』, 2018.10.23.

48) 윤보영, “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문화와사회』29-1, (한국문화사회학회, 2021), 39-90.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 안에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은 남성에게,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에게 더욱 강조되었다. 때문에 북한의 여성이 불평등한 구조에서 해방되었다는 주장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지 30년이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 북한사회 전반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의 논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Ⅳ. 원칙과 현실 사이: 능력

북한이라는 국가를 수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여러 규범은 90년대 중반 이후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 사이의 조율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기준에 두고 과정은 느슨하게 명분은 보다 확고하게 강조되고 있다. "친 인민적이지만 또한 친 현실적인" 두 개의 조건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다.[49] 사회주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개별 인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각자의 지혜를 총 동원하여 수행해야 하며 북한사회는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매끄럽게 진행하는지를 두고 능력이라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민반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민반은 20~50세대를 한 개 단위로 묶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간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체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요구한 정책을 수행하고 인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알뜰하게 꾸리기 위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 즉 기본이 되는 조직이다.[50] 북한 지도자의 이상 속에서 북한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인민은 명랑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면 인민은 그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용감하게 극복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북한은 낙원으로 명명된다. 인민반은 지도자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한사회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는 인민의 삶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작은 공동체의 역할을 부여받는다.[51]

인민반은 크게 세 가지로 역할을 수행한다. ① 인민생활과 관련된 행정관리와 ②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③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민위원회, 동사무소, 인민반은 인민이 해당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배분하고 관리한다. 이때 해당 법 37조에 의해 인민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1조에 의해 인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리와 마을, 살림집을 언제나 알뜰하게 꾸리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52]

지방정부 즉 인민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사무소에 분배해주면, 사무소는 역시 자신이 관할 구역 안의 인민반에게 담당해야 하는 구역과 역할을 분배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인민반은 인민반에 소속된 인민과 함께 지역 발전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꾸리고(만들고) 마을과 집 그리고 거리를 위생문화적으로 돌봐야(유지보수)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필요한 부자재를 마련해야 하고, 육체적 노동을 통해 완성하며 사회경

---

49) 리연선,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문답』, 평양출판사, 2020.

50)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사회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묶어 조직한 우리나라 국가, 사회생활 기층조직의 하나. 모든 주민은 다 인민반에 망라되여 생활한다. 인민반장은 인민의 충복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인민반을 잘 꾸릴 수 있다. 인민반원은 인민반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인민반, 인민반장, 인민반원,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p. 1700.

51)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62.1.119)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62.1.1

52) 도시경영법(2015)』, 1992년 제정, 2015.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 수정보충, 『주민행정법(2010)』, 2010.7.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4호 채택

제적 자원의 빈 공간을 인민이 채우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돈과 물품 그리고 노동은 세금이 아니라 인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기 위한 노력으로 표현된다.[53]

인민반은 전통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인민을 대상으로 공식 여론조사는 하지 않지만 인민반, 동사무소, 인민위원회, 중앙정부 그 외 북한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소, 조직마다 해당 기관 안의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밀하게 청취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있다. 가장 낮은 기층조직에서 가장 높은 정치단위까지 연결된 겹겹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상의 동향과 여론이 파악된다. 해당 지방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민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 여론이 높으면, 지방정부의 살림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불온한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이다.[54]

2023년 12월 채택된 '인민반 조직운영법'은 인민반을 운영하는데 돈을 걷지 말 것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며 "돈과 물자를 내라고 내리 먹이거나 걷어 들이는 세외 부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반원의 자원성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북한사회가 지도자에서부터 가장 기층조직의 운영자 인민반장에게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지 가늠하게 해준다.[55]

Ⅴ. 나오며

북한정부는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안정시키고 내수시장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 이데올로기만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민에게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규범을 지키며 생활할 것을 요청하며 내부경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인민은 변화된 세상에 얼마나 잘 적응하였는지 각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게 기대하는 것 역시 자신들의 체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리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능력으로 판단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본은 김정은의 2024년의 남한과의 관계를 "조선 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판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56] 한반도에서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 앞에 어떤 '어떻게'의 수식이 들어갈 수 있는가는 남한 혼자만의 결정을 아무리 한들 관계란 상대가

---

53) 인민반 관련, 윤보영, "일상의 관계성과 공동체의 변주," 최지영 외,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통일연구원, 2021), 216-269.

54) 여론조사도 하죠. "누가 어떤 불평을 했음" 보고를 하는 거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산골마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속들이 알고 싶은 거야. 여자들끼리 "3일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사람 죽겠네" 하는 소리까지 다 보고하거든요. 평양시 당책임비서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세포비서가 매일 4시에 타자쳐서 6시 전에 초급당에 보고해요. 그러면 중앙당 조직부에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거죠. 어디에서 좋은 일이 있어났고, 어디에서 누가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1978년 출생 여성, 평안남도, 2019년 탈북, 2019년 입국, 2020년 6월 6일 인터뷰.)

55) 제24조 (세외부담행위금지) 인민반장은 각종 명목으로 반원들에게 돈과 물자를 내라고 내리먹이거나 걷어 들이는 세외부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반에서 제기되는 지원,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원들의 자원성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민반조직운영법,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국정원, 2024), 206-211.

56)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1.16.5면.

있어야 만들어지는 법이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함께 존재할 것인가?

어쩌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주장들은 각자의 북한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다. 한층 더 나은 방식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지만,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는 습관처럼 말이다. 로런 벌랜트는 자신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애착과 관습적 낙관이 오히려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잔인하다고 설명한다.[57]

우리는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라는 목적과 도구적 관점에서 북한을 놓여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안다는 것. 북한은 어떤 맥락 속에서 남한과 다른 체계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북한은 어떤 세계관을 가진 곳인지, 북한 정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성취와 어떤 정체를 겪고 있는지, 북한 사회는 어떤 구체적인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지 알아야 일반적인 이웃나라 관계라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기본에 두고 남북교류가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가치와 규율은 북한이 처한 환경에 맞춰 일정 부분 조응하며 그 안에서 시장이라는 상반된 힘이 이미 상호결합하며 조율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사회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에도 체제를 지키겠다며 버텨온 이들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지켜보아왔다. 김여정은 처음 남한에 왔을 때 기록한 것처럼 이들은 “번영의 미래”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58] 그러나 남한의 정부가 “평화는 경제”라며 북한을 어떻게 번영하게 해줄 것인지 “화려한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때, 남북한 사이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북한이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북한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가? 보편이라는 기준을 소유하려는 부류의 사고가 얼마나 자기본위적이고, 윤리적 오만인지에 대해 이매뉴엘 월러스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지구적 보편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지구적 보편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인간의 기획은 인류의 위대한 윤리적 기획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강자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넘어서 선에 대한 진정한 공통의(따라서 훨씬 더 전지구적인) 인식으로 향해 갈 때 비로소 성취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지구적 인식은 그러나 다른 구체적 토대, 즉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평등한 구조를 요구한다.”[59]

주디스 버틀러의 조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버틀러는 스스로에게 주는 맹목적인 믿음 즉 나를 기준으로 타인에게 요구하는 “당신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논의가 윤리적 폭력임을 지적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지평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개인의 일인칭 규범과 관점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차피 같은 규범을 공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타인의 윤리규범은 내가 승인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 그로써 겸손함과 타인을 수용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나 역시 판단하는 자의 위치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판단당할 자, 도덕적으로 불완전하여 용서를

57) 로런 벌랜트 지음, 박미선·윤조원 옮김, 『잔인한 낙관』, (서울: 후마니타스, 2024), 9-14.
58) 김여정은 2018년 청와대 방문에서 다음과 같이 방명록을 남겼다.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김여정. 문관현 홍국기, “독특한 김여정 방명록 필체 눈길, 김일성 서체와 유사,” 『연합뉴스』, 2018.2.10.
59) 이매뉴엘 월러스틴 지음, 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파주: 창비, 2008), 56-57.

받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낫다.[60]

김여정의 담화에서 거친 단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다. 이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남한이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남북한 사이에 했던 최소한의 약속을 의지를 가지고 지켜줄 것과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읽어야 한다. 또한 권위는 영향력에 대한 기대치이며, 사회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여성의 발화에 대한 평가가 남한사회의 여성에 대한 관념을 거울처럼 보여준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의 당사자가 남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61]

60)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서울: 인간사랑, 2013), 74-82쪽.

61)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카포위츠와 탈리 멘델버그는 남성 중심적 집단에서 여성의 발화권과 영향력이 어떻게 억제되는지 실험으로 보여준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의견은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Christopher F. Karpowitz Tali Mendelberg, *The Silent Sex Gender, Deliberation, and Institu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미군주둔과 여성
(기지촌 문제를 중심으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들어가며

여성과 한반도 평화 국회토론에 참여함에 앞서 기지촌여성 인권운동가 김애란 선생님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 기지촌여성(미군위안부)의 삶을 개인의 참혹한 인생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아픔으로 세상에 알리시고, 진실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주신 분입니다. 깊은 애도와 기도로 그 분과 수많은 기지촌여성 분들의 진실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알려지고, 반성과 위로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동두천에서는 351일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과 평화인권의 장소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천막농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은 비바람이 칩니다. 흔들리는 천막에서 성병관리소를 지켜내고자하는 지킴이들과 연대의 힘을 보태시는 많은 분들의 힘을 느끼며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한 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성병관리소를 지키고자 한 싸움을 한지도 2년 6개월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0여 년 전부터 이 건물을 역사적 장소로 평화로운 개발을 하자고 요구해 왔으나, 동두천시 행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병관리소 건물이 90년대가 되기 전에 사라지는 동안, 운명처럼 이 건물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살아남아 역사를 증거하며 아파해 왔습니다. 그렇게 27년을 방치된 채 버티어 온 건물이 동두천시의 철거개발이란 이름으로 지워지려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적극적인 보존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시간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성병관리소와 기억의 의미를 매일같이 되새기며 지금도 보존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존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토론에 있습니다.

기지촌의 사전적 의미는 '군사적, 전략적, 정책적 이유로 병영이 주둔하는 지역 주변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군사취락'입니다.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우리나라 군사취락의 연원은 신라시대의 진촌(鎭村)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군사취락이 형성된 것은 근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전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그 주둔지였던 신용산·나남(羅南)·진해 등지에서 발달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부산의 하야리아 및 텍사스, 경기도의 운천·포천·문산·양주와 파주의 용주골, 평택의 쑥고개, 동두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들 주요 미군주둔지에는 수복과 더불어 기지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미군의 외출과 외박이 허용된 1957년부터 급격히 번창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군대 주둔지 주변의 군대 관련 업종에 종사가 주된 마을이 기지촌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한국전쟁, 미군주둔 등의 거친 역사를 지나며 현재의 의미로 각인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에게 기지촌은 더욱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미군주둔으로 형성된 한국 내에 있지만 미군을 위해 기획되고 관리되던 공간’
‘행정적으로는 한국의 영토이나, 사실상 미군에 의해 유지되는 한국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던 지역’
‘기지촌여성(미군위안부)가 미군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각종 특수 유흥업소가 즐비한 지역’

이런 이미지로 떠오르는 기지촌 중 동두천이 있습니다. 저는 동두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동두천 사람으로 살면서 기지촌 이미지가 주는 피해를 고스란히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 이상의 사람들이 겪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주민들도 기지촌에 산다는 것은 죄악의 늪에 사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으니, 실제 기지촌에서 청춘을 바친 여성들의 삶은 말로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토론에서는 동두천 기지촌의 이야기와 기지촌을 다룬 몇 편의 뉴스를 통해 미군주둔과 여성의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2. 동두천의 미군주둔

동두천에 미군이 처음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7월부터이다.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미군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주민들의 일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한국전쟁과 전쟁 중 미군 주둔이었다. 피난을 갔다 돌아오니 마을과 농지에는 미군이 자리하고 고스란히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돌아갈 줄 알았던 미군은 경원선과 3번국도가 지나가는 동두천(당시 지명 이담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완전 주둔을 하였고 원하지도 달라고도 않았던 동두천의 운명을 바꾼 시간이 시작되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동두천(당시 양주군 이담면)은 1953년부터 시가지의 대부분을 미군 기지에 내주게 되었다. 주민들은 오히려 미군기지를 피해 가면서 고단한 살림살이를 이어가야 했다. 1952년 11월 말경 주민 소개(疏開)가 끝나고, 1956년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으며, 토지징발 보상금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다. 가옥 보상은 전무했고, 토지에 한하여 국가발행 채권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해 중간에 소실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가난한 주민들은 채권을 헐값에 브로커에게 넘겨주는 일이 허다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가옥주 그리고 그곳에 고향을 둔 사람들만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금이나 가옥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미군이 동두천 주변기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나 미군이 사용료를 내는 일은 없었다.
동두천은 경기도에서 미군기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캠프 케이시 기지를 중심으로 캠프 님블, 캠프 모빌, 캠프 캐슬, 캠프 호비, 캠프 알라모, 캠프 세인트 바바라 등이 존재했으며, 1971년 4월 1일 미7사단의 철수 이후 미2보병사단이 옮겨와 경기북부를 책임지게 되었다. 당시 주한미군은 육군 29,000명과 공군 10,000명, 해군 1,000여 명으로 총 40,000여 명이었다. 이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정찰 및 경계 임무는 대부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1974년 이후 파주와 연천, 동두천의 일부 미군기지들이 점차 폐쇄되었다. 연천군에 소재했던 캠프 알라모는 비무장지대의 군사 첩보를 담당하는 곳으로, 1974년 한국군에 모든 시설을 이양하고 폐쇄되었다. 캠프 세인트 바바라는 1960년 120개 동의 반원형막사 촌으로 바뀌었고 장교 클럽 등 여러 건물

들로 즐비했지만 1974년 한국군 포병대에 이양되었다. 캠프 비버(Beavers)는 1961년 미 7사단 73탱크대대에서 사용하다가 1971년 기지 재편에 따라 떠나면서 한국군 기지로 바뀌었다. 연천 운천 파주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폐쇄되면서 동두천 미군기지의 영향력과 규모는 가히 최강이었다.

캠프 모빌은 신병교육대대 소속 장병들이 주둔했고, 미 국방부와 계약한 100여 명의 민간 계약자가 상주하고 있었다. 1960년대 미 7사단이 활주로 공사 이후 비행장에 49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한 것을 1972년 미2사단에 전부 이양했다. 이때 비행장은 알파(A)-150이라고 명명되었다. 1980년 임시 막사는 근대식 막사로 대체되어 2008년 기지 폐쇄 직전까지 사용되었고 1992년 1월 6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연설했다. 캠프 캐슬은 1971년부터 2004년까지 미 2사단 2공병대대와 70지원대대 본부중대가 있었던 곳이다. 몇몇 임시 막사는 1980년 현대식 거물들 사이에 반환 전까지 잔존했으며 100여 개의 건물 대부분은 1975년 이후 신축된 것이다. 이곳은 1구역(경기 북부지역)의 위험물질 보관소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센터가 있으며, 기지 내 가구시설을 저장하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주둔 인원은 약 6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군인은 500명이었고 나머지 민간인과 군무원으로 1구역의 공병작전을 지원했다. 1991년 10월 16일 대대는 기계화공병대대로, 1992년 2월 16일 미 2사단 1공병여단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여단 내 5중대는 50공병대대로 새로이 재편되었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캠프 케이시와 함께 캠프 호비는 단일 행정부대로 통합하고 2006년 시설관리사령부(IMCOM)의 창설로 그 예하 시설관리사령부 한국지부로 바뀌었다. 2005년 6월 15일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미 육군의 새로운 전력 구조 개편에 따라 2공병대대가 해체되자 2015년 캠프 캐슬 기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했다. 이곳은 동양대학 동두천 캠퍼스가 조성되어 2016년 3월 개교했다.

캠프 님블은 미 702여단 지원대대 A와 B중대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1980년 현대식 막사와 시설을 설치하고 기지 내 24개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이곳은 2006년 케이시 기지에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모든 병력을 케이시로 이동시켰고 2007년 반환과 함께 폐쇄되었는데, 현재는 기지의 남쪽 일부는 수변공원, 일부는 한국군인 아파트를 조성하였다.

캠프 케이시는 1960년 스포츠 경기장(한슨 필드 하우스) 건설과 1971년 미 7사단의 철수에 따라 미 2사단사령부 및 1여단 본부로 바뀌었고 1974년 11월 22일 지미 카터 대통령 외에도 부사와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이 방문해 머물렀던 곳이다. 1980년부터 85년까지 현대식 막사 증축(병영시설 현대화 공사)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1990년 1,160개 건물 개선 사업으로 용산 기지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기지였다. 1994년 미 2사단 본부는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2006년 케이시 엔클레이브 미 육군 기지로 개편되었고 전차 및 기갑, 포병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캠프 호비는 동두천시 군인 최대 2,500여 명과 약 500여 명의 민간인 계약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지 내 도서관과 체육관 등 여러 상점이 있다. 1954년 이후 7사단과 2사단이 주둔했는데 1990년까지 2사단 5, 9, 17연대 각각 1대대에서 담당하였고 1구역에 임시훈련소(입소대대)가 있었으며 일주일 동안 기초훈련과 의정부시 문화체험을 한 후 자대에 배치되도록 담당했다. 현재 기지는 기갑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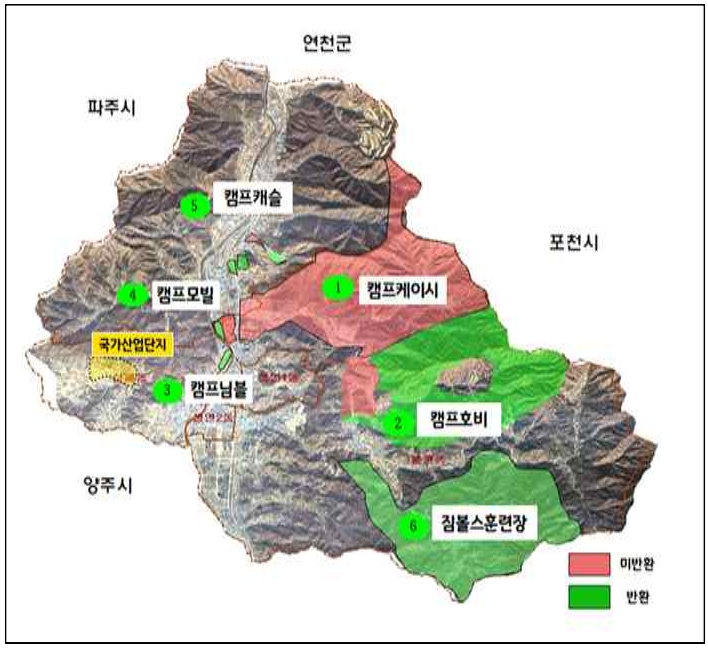


그림 2 동두천의 미군공여지 현환 / 동두천시 자료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약 860만 평에 달한다. 이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면서 2014년 완전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케슬 일부분, 캠프 모빌 일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는 미군 3000여 명이 그 넓은 미군기지를 지키고 있다.

인구 3000명의 시골이었던 동두천은 미군기지로 인해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경제의 상당부분을 미군기지에 의존하여 살아왔다. 2004년 이라크전에 동두천 미2사단 병력이 파병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변화로 기지는 그대로인채 미군 병력만 대폭 감소하여 미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동두천시 경제는 경기도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며, 심각한 지경에 있다. 기지촌 경제는 거의 폐허 수준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미군으로 기지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여성이 기지촌에서 사라진 것은 1990년 중반부터이다. 그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필리핀 여성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한다. 동두천 시민들은 미군기지의 반환과 국가보상만이 동두천의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미군기지는 총 73개가 있다. 용산, 평택, 오산, 대구, 칠곡, 의정부, 수원, 군산, 광주, 청주, 부산, 제주, 동두천, 포천, 상주 등 한반도 곳곳이 미군의 군사적 영향력 하에 있다. 있는지도 모르는 소규모 기지들이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 과거 150개의 미군기지가 있을 때와는 기지촌의 수와 규모는 분명히 축소되었다. 그리고 기지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지역이 대다수이다. 동두천과 평택 정도 기지촌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민들은 아예 알지 못하거나, 있어도 과거의 단편으로 존재한다. 동두천이 그 많았던 기지촌의 대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보병 사단, 가장 많은 미군 병력뿐 아니라 동두천의 생계 수단이 미군기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의 소도시로 미군기지로 인해 상업도시로 발달했고, 그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미군 때문에 부산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달러가 넘쳐나던 시절, 어떤 산업시설을 가질 생각도 못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계획이나 산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도 있다. 북한에 대한 공포로 동두천에 미군기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경제력을 갖는 것은 실제로 무시되었다. 이로 동두천은 미군기지, 군사도시, 기지촌 이외로 드러나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기지촌의 대표가 되었다.

3. 미군주둔과 여성

미 7사단이 주둔했던 시기(1952~1971년)의 동두천은 굴곡도 많았고 애환도 많았다. 동두천의 동안역(현재 동두천역) 주변에 미 보병 7사단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인구 밀집 부락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1963년 1월 1일자로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다. 동두천읍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두천리가 이담면이라는 이름보다 유명해진 이유이다. 미군주둔으로 이름조차 바뀐 기지촌 도시는 유일할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인구 3천여 명의 조용하고 평화롭던 농촌마을 이담면 동두천(개천 이름) 주변에 미군 캠프가 설치되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기지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규모가 커져 갔다. 기지촌 주변에는 제일 먼저 술집과 유흥가가 들어섰고, 주둔 군인들과 주민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였다. 미군들은 달러와 같은 화폐 기능을 가진 군표를 사용하여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풍부한 물자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한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 심부름,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다.

1971년 미7사단이 2만여 명의 병력과 함께 철수하고 미2사단이 주둔하면서 지금까지 기지를 차지하고 있다. 미2사단은 최전방 근무시기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병력이동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각종 군사훈련은 기지 부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미군부대 주변을 서성인다고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 훈련장을 오가는 전투차량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훈련의 피로를 풀고자 외출 나온 병사들이 일으키는 말썽이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비쳐지는 주한미군은 안보를 위한 군대이면서 병력이동 및 군사훈련으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집단 그리고 틈만 나면 매춘으로 시간을 보내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미군부대 주변에 생겨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기지촌이 바로 그것이다. 기지촌은 그 생계수단이 여성의 성매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이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지촌경제의 핵심은 미군과 기지촌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던 시절이었다. 미군과 기지촌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술집인 클럽들과 미군부대 PX에서 흘러나온 외제품 판매책, 암달러 상, 포주, 그리고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 중개업 사무소 등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기지촌 경제가 정착되었다. 기지촌 경제의 많은 부분이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상 미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은 그곳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으며, 이는 파괴된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택한 기지촌 여성들의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미군주둔의 유지와 달러획득을 원한 한국정부는 기지촌에서 이루어지는 매춘에 눈을 감았고,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젊은 미군병사들의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였다.

1960년대 동두천 기지촌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본다. 안보를 위한 군대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잦은 범죄, 강간, 총기 사용까지 있음에도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찾기가 어렵다. 또한 기지촌 여성뿐 아니라 기지촌의 주민들조차 미군의 존재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면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50, 60년대 뉴스를 살펴보았다. 주민들이 감당했던 고통과 피해를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은 분명 여성이었다.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팔려 온 기지촌여성들이었다.

과연 싸야만 했나

部隊옆에가야 사는 現實에
美兵도아는「구멍뚫린通路」

과연 싸야만했나 기지촌 - 동두천 운천 파주의 실태를 본다 - 1964. 2. 21 동아일보

지난 18일 밤 11시 40분 경기도 동두천읍 동두천리 미군부대 철조망밖에서는 또 한사람의 한국인이 미군보초병의 총탄에 쓰러져 갔다. 경찰 집계에 의한면 62년도 미군부대 도난사건이 680건, 63년도에는 677건으로 3건이 줄었으나 이에 따르는 미군측의 총격 등으로 발생한 한국인 인명피해(사상자0는 62년도에 102건이었던 것이 63년도에는 157건으로 55건이나 늘었다. 보초병은 꼭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동두천 운천 파주 등 소위 기지촌의 미군부대 철조망은 부대와 이마를 마주대고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철조망 어디엔가는 윤락여성과 미군만이 아는 구멍뚫린 통로가 있다. 지난 18일 하오 8시만해도 운천 주둔 미7사단 317연대 부대 철조망을 넘어들어 미군과 같이 있어 김영자(21)양이 붙들려 나왔다.

危險(위험)한美軍部隊周邊(미군부대주변)「못골」마을 厄運(액운)의날 - 1964. 02.04 동아일보

危險한美軍部隊周邊

「못골」마을 厄運의날

서용자씨의 경우 지난 2일 새벽 5시쯤 깡통이나 주워오겠다고 경기도 동두천읍 못골부락 오두막집을 나간 허만손씨의 처 서용자(34)씨는 인근의 7사단 31연대 동초 '카메룬 로버트(22) 일병이 쏜 총탄에 맞아 부대 철조망 밖 2미터 지점에서 벽 5시 55분쯤 숨을 거뒀다. …

오년 전 못골부락에 들어온 허씨네는 남편이 산에 가 나무를 해오고 처는 미군부대주변에서 쓰레기를 주워다 파는 찢어질 듯 가난한 살림, 하루기껏 뛰어다녀 5원 벌이가 고작이고 그나마 임신 아홉달 째된 서 여인은 두어달 전부터 몸이 무거워 그만두었다. 그러던 지난 2일 새벽 서여인은 큰딸 학교 개학날이고 음력명절이 다가오자 아이들 때때옷이나 마련해 주려 5원벌이나마 깡통을 주우러 부대주변에 갔다. /

이혜복씨의 경우 못골부락 이여인(36)은 딸만 둘 거느린 위안부, 2일 새벽 2시쯤 인근 미7사단 32연대 철조망주변으로 유객을 나갔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오라는 병사가 있어 그를 따라 구멍뚫린 철조망으로 내무반에 들어갔다. 콘셋트 안에는 3명의 병사가 술이 곤드레가 되어 있었고 이여인을 보자 일제히 기성을 터뜨리며 알몸으로 벗기고 코트며 스커트를 갈기갈기 찢고 3명이 차례로 욕보인 후 이연인의 돈 3075원마저 강탈했다. … 군수사기관은 가해자 윌리암 헤랄드 일병과 B. 로시니 일병 및 B 알토 상병 등을 연행 문초중이라는데 못골부락에선 작

년 9월에도 철조망 주변에서 위안부 1명이 옷을 벗기고 목졸려 죽었으나 아직 범인을 못잡고 있다.

뜯기는 달러에의 과녁

外換管理所설치 의견대두

모든收入은 抱主손에

PX商品 팔아주는 골

위안부들 뜯기는 달러에의 과녁 - 1969.4.24. 매일경제

외국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철조망 주변, 속칭 기지촌에는 몇 푼의 달러를 줍기위해 후조처럼 몰려든 위안부들을 한낱 범죄자라고 지탄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도 무책임하고 빈곤하게 아닐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윤락여성의 수는 약 2만2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준 약 4천5백여 명이 서울과 부산에 몰려있고 주둔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가 특히 집중된 경기도는 약 1만3천여 명이나 되어 전국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 특히 파주 군관 내에는 38개 기지촌에 5천여 명의 위안부가 있으며 오산기지 주변에는 1천 9백여 명, 평택 지구에는 6백여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경기도내 윤락여성의 60% 이상이 위안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경기도 내에는 동두천 양주 부평 포천 등지에 주둔군 철조망의 그늘을 따라 곳곳에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다. 경북 칠곡과 부산 등지에 산재한 위안부의 수를 합쳐 전국에는 약 1만여 명의 등록된 위안부가 있다. 미등록자까지 합치면 1만 3~4천여 명은 될 것이라는 추계.

"우리들을救해주시요"

惡質抱主밑에선암만벌어도負債만增加

洋公主들當局에눈물의呼訴

金納制度를採擇

國務會議現穀納入制廢止可決

犯罪嫌疑없다

趙氏邸宅襲擊容疑者釋放

"우리들을救(구)해 주시요" =惡質抱主(악질포주)밑에선암만벌어도負債(부채)만增加(증가)= 1953.06.29 경향신문

악질 포주 밑에선 암만 벌어도 부채만 증가 - 양공주들 당국에 눈물로 호소

.....

미군지불의 10달라를 세금이니 부식대니 우선 1달라를 포주가 제한 다음 9달라를 또 반분하여 포주가 착취하고 위안부에게 돌아갈 4달라50센트를 '특수카페조합'이란 악마소굴의 자작환율에 의해 우리 돈으로 환산해주고 포주들은 10달라를 암시장 가격으로 2300환에 교환하여 1525환을 자기소유로 하고 위안부는 675환만을 받게 되는 것을 폭로하였다. 포주들은 대개 10여명 내외를 거느리고 있어 여러 위안부가 버는 하루 수입 약 100달라로 포주의 얼굴은 기름지고 위안부들은 몸이 파릿하여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기다 포주들은 화장품 화려한 옷 같은 것을 거리에서 사다가 폭리를 하여 이모저모로 피를 빨아 차금이 꺼지지 않고 소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만일 검찰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밤의 여인'들은 포주에게 유리한 말을 해야만 하는 슬픈 운명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포주들의 잔악면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면 모든 면이 폭로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그리고 차금을 다 지불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지옥에서 우리들은 지옥조정자인 악마포주를 엄격히 처단해 줄 것을 검찰청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검에서는 접수 후 곧 부산지검에 엄격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하여 근일 모든 악덕 포주의 간악상이 법적으로

폭로될 것으로 보인다.

人權유린과 國民保健의 사이

議政府일대「擴大檢診」의 實態

「檢査수모」에 求人難

職員불친절-施設도 엉망

돈받고 合格證발급-落檢者 전격收容도問題

인권유린과 보건사이
- 1978. 3. 13 동아일보

얼마전 충남 일부 시군에서 성병검진대상을 확대, 모든 접객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실시하려다 인권유린이란 심한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하고 말았었다. 그러나 기지촌이 몰려 있는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는 특수 사정이라 하여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처음으로 접객업소 전 여종업원에게 대해 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다, 따라서 많은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기피해 여종업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구인난까지 빚고 있다. …
당초에 총대상은 위안부외에 환경위생업소 313개소 식품 및 접객업소 528개소 등의 여종업원을 합쳐 모두 2천여 명, 당국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처음엔 검진증 색깔을 세가지로 구분, 식품접객업소 종업원은 녹색, 환경위생업소는 노랑, 위안부는 분홍으로 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코발트색으로 통일, 기재내용과 규격도 똑같이 만들었다. …

철조망 근처에서 깡통을 줍다 미군의 총에 맞아 죽은 그 사람들은 제대로 처우되었을까? 그 보초병은 살인죄로 그 죄값을 치루었을까?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위안부를 했던 그 여인은 그 강간범들이 처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 그 고통에도 다시 위안부를 했던 그 여인은 그 공포를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수치로 보여지는 위안부의 숫자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권을 갖고 대하였을까? 몸만으로 달러를 벌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애국자가 되었건만, 오직 달러만 버는 수단으로 대우받던 그 무너지는 인격은 누가 이해했을까? 우리를 구해달라는 호소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을까? 한배를 타고 있는 정부도 검찰도 경찰도 포주도 달러에 혈안이 되어 그 호소를 제대로 듣기나 했을까? 심지어 성병 검진의 대상을 모든 접객업소 여성으로 확대하며 여성을 성병보균자로 취급하였던 그 정책은 무엇인가? 위안부와 구분하던 검진증은 여성끼리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어 기지촌을 완벽히 게토화했던 그 정책은 또 무엇인가?
전쟁 이후 그 가난했던 시절에 강제로 애국자가 되어야 했던 그 처참한 기억을 누가 보상해 줄까? 지금도 입 다물고, 가난으로 살아야 하는 생존하는 기지촌여성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것이 당신을 이용한 자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해주는 사과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난했으니 팔자라고 여겨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수시로 등장하며 한국에서 여성의 역사를, 여성의 인권을 바로 잡고 진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되새기게 한다.

4. 성병관리소의 보존이유

성병관리소 보존싸움을 하면서 들은 말이 있다.

“여기 성병관리소가 미군상대하던 여자들만 치료했는 줄 알아. 칠리라고 그때 남자들은 다 갔던 사창가 여자들도 치료했다고. 아파서 나라가 치료해 주었는데 무슨 이게 역사야. 치욕스런 장소를 왜 남겨두자 그래!”

“나는 있는 줄도 몰랐어. 너희 때문에 동두천 이미지가 더 더러워졌잖아.”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남겨둬서 뭐할려 그래!”

“다른 직업도 있는데 왜 기지촌으로 오래?”

이 말들에는 역사는 없다. 여성도 없다. 인권도 없다. 기억도 없다.

성병관리소의 보존은 역사와 여성과 인권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평화와 권리로 바꾸는 일이다.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면서 인정받아야 했던 기지촌 여성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기지촌과 기지촌여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이해하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돈벌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돈벌려고 몸을 팔았던 여자들 이외에 국가가 어떻게 용인하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이용했는지 인권을 유린했는지 진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안보의 희생양으로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기지촌 여성의 희생과 고통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들을 빼고 희생양의 언사가 충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의 조례로 기지촌 할머니들의 생활비가 일부 지원된다 한다. 조례로 기지촌 여성에 대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카이빙을 하게 된다. 다행한 일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판에 참여했던 할머니들 외에 더 많은 여성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테니 말이다.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통해 당신들의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치욕과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 나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충분한 사과와 인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서로의 고통을 다독일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통해 국가폭력이, 전체주의가, 군사주의가 어떻게 인권을 말살하고 참혹한 역사를 만드는지 보여주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방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과 반성이 필요한지 알려주어야 한다.

전쟁을 회복하는 것이 평화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평화를 만드는 길이 인정과 위로, 사과로 이루어짐은 자명한 일 아닌가?

미군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에는 다음과 같은 김정자님의 생각이 있다.

첫째,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언니들이 겪은 일은 정말 끔찍해. 그 언니들 일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미군들 위해서, 그리고 외화획득 시키려고 우리를 희

생시킨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왜 아직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일본군 위안부 언니들은 외국 정부에 당했지. 물론 우리도 미국정부에 당한 것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정부에도 당했다는 거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감추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과거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이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의미에서 취하를 결정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제 미군 위안부의 진실을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기지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기지촌여성이 아니다.
기지촌여성의 입장에서 기지촌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계급, 성별,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것은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나는 또한 기지촌의 역사가 바로 기록되길 바란다. 여성 개인의 일이 아닌, 작은 소도시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기지촌 여성들에게 세상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린다는 행위는 단순히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 행위, '변혁' 그 자체다.

나는 동두천의 아저씨들이 여전히 기지촌 할머니들을 함부로 부르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년, 양색시, 독한 년.. 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것이다.

넷째,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지촌 언니들과 새롭게 연대하겠다는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기존의 활동가들과 조직들마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잘 안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기꺼이 연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윤금이 씨가 기억난다.

미군병사 한국여성'잔혹살해' 사회단체·정당 철저수사 촉구 1992.11.05 한겨레신문

경찰이 한국여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군병사를 붙잡고서도 기초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미군쪽에 넘겨준 데 항의해 시민·종교·여성단체와 정당 등이 용의자 신병 인도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431 속칭 '기지촌' 안 김성출 씨 집 셋방에서 술집종업원 윤금이 씨가 알몸상태에 머리를 흉기로 얻어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은 용의자인 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일병을 21일 오전 0시 40분께 부대정문 앞에서 붙잡았으나 미군범죄수사단(CID)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곧바로 미군 쪽에 넘겨주었다.

미군병사 한국여성 '잔혹살해'
사회단체·정당 철저수사 촉구

판자촌사망 관련자 처벌요구
부산 학생·시민 대책위 결성

기지촌여성 미군위안부의 문제를 세상에 알린 사건이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폭력에 의해 쓰러져 갔지만 알려지지도 책임지지도 않았었다. 윤금이 씨의 죽음은 대한민국에 미군의 치외법권이 있음을 알리고, 시민들의 연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었다. 이후 미군범죄에 정당히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자주와 인권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지촌 여성과 미군범죄의 문제는 그 시점에 멎어있다. '윤금이'로 대표되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죽음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의 고통이 민족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상징으로 부각되었지만 이후에는 다시 사회적으로 은폐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기지촌, 기지촌여성, 미군위안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변혁하려 하고있는지 다른 반성이 필요하다.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평화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싸움은 미군위안부를 알리고, 당사자가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세상을 바꾸고, 기꺼이 연대하고자 함이다.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명예와 인권의 문제로 기지촌을 바라보고자 함이다. 이로 국가의 책임과 책무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살피는 시민의식의 확장을 바란다.

윤석열 탄핵광장의 의미와 2030 여성들의 도전

유하영(두레방 자원활동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뒤,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8년 만에 다시 퇴진광장이 열렸다. 그런데 광장의 분위기는 2016년과 달랐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다시 만난 세계”가, 촛불과 함께 응원봉이 공존했고, 엄숙한 분노 대신 즐거운 저항이 광장을 채웠다. 그 중심에는 청년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수적 참여를 넘어 광장의 분위기 자체를 주도했다. “최애야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라는 피켓이나 “우리는 절박함이 아닌 사랑으로 연대하는 세대”라는 발언이 시사하듯, ‘응원봉 소녀(동지)’의 등장은 세대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광장 정치를 보여준다. 언론 역시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다. 12월에는 다수의 언론에서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나온 2030 여성들을 찬양하는 동시에, 극우화되는 같은 세대의 남성들을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정치권은 청년 여성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던 권영국을 제외하고 성평등 공약을 제대로 내놓은 후보는 없었다. 심지어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은 공중파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광장의 정부를 자칭하며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도 광장의 청년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자고 말하며, 정치가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억울함도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뤘고, 후보로 지명한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이었다.

정치가 청년 여성들에게서 눈을 돌린다고 청년 여성들 역시 정치에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광장에서 외쳤던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광장의 구성원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윤석열 탄핵광장의 의미를 20대 페미니스트 여성의 시선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올해는 분단 80주년이다. 2030 여성들이 어떻게 광장에서 평화를 실현했는지 조명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리는 데에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번 탄핵광장에서는 유독 청년 여성들의 활약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았다. 여성들은 “우리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계속 광장에 있었다”라고 답한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나온 ‘촛불소녀’와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나온 ‘유모차부대’ 역시 2030 여성이었다. 2016년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여자라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며 추모 집회에 나온 청년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해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던 이화여대 학생들도 잊을 수 없다. 2015년 메갈리아를 필두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여성들의 정치적 의식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은 2018년 혜화역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이다. 당시 시위 참여자는 미조직된 익명의 여성들이었다. 혜화역 시위가 가지는 파급력은 사회 전체를 강타했다. 2019년도에는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이 돌아왔고, 2022년 대선에서 이준석이 급부상했다. 그 정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다.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백래시로서 여성혐오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도 청년 여성들은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를 규탄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국민의힘은 더 강력한 젠더 갈라치기 정치를 자행했고,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에게 연대하는 페미니스트를 거부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낙인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침묵을 강요받는다고 정말 입을 다물 수는 없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목

소리를 내는 게 버거워질 때쯤, 선두에서 여성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경을 동원해 본인이 싫어하는 모든 이들을 척결하려 했다. 그 시도는 실패했으나, 내란의 잔재는 사회 곳곳에 퍼져있었다. 윤석열과 윤석열이 남긴 것들을 치우기 위해 청년 여성들은 늘 그래왔듯 광장으로 향했다.

페미니스트는 국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12월 7일 국회 앞 집회에서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 씨가 발언대에 올라왔다. 그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소수자들을 호명하며 발언을 열었다.

"광장에 자리하고 계신 시민, 특히 이런 기회 아니면 큰 소리로 소리 한번 지르기도 어려운 여성 시민 여러분,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페미니스트, 퀴어, 장애인, 비정규직, 모든 사회적 소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서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다시 쓰는 민주주의의 서막과도 같았다. 해가 환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광장에서 페미니스트는 낯선 존재였다. 말하는 여성을 향해 환호하기보다는 아우성을 질렀던 시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까지 집회가 이어지자 청년 여성들이 들고 있던 응원봉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응원봉은 단순한 시위용품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조명이 되었다. 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성 정치의 귀환을 기록하기 위해 대자보를 썼다.

페미니스트는 국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6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올린 일곱 글자를 기억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두서없고 폭력적인 문구에 페미니스트들은 분노했다. 맥락도 실체도 없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청년 남성들은 열광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여성혐오가 헤게모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여성혐오를 사회 전반에 퍼뜨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열고, 내수를 박살 내 자영업자를 도산시키고, 의료민영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기득권의 배를 불리면서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무엇보다 그는 159명의 젊은이가 이태원에서 죽어가도록 만들었다.
지지율이 추락하던 어느 날,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윤석열은 근거 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본분을 잊지 않은 국민의 대표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용기 있는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이들을 지켰다. 어떻게 국가원수라는 자가 국민의 대표와 시민을 사살하려 할 수 있는가. 계속되는 관계자의 폭로와 입건된 문서는 윤석열의 치밀한 계엄 계획을 증명한다. 다행히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그는 아직도 군 통수권을 쥐고 있다. 그의 비상식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밤 국회에서부터 매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회로 향했다. 여당이 등을 보이고 도망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에서 돋보인 이들은 응원봉을 든 102030 여성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지난 7일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 씨는 연대의 현장에서도 혐오에 노출되는 퀴어 페미니스트의 현실을 목청껏 외쳤다. 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표하며, '페미는 닥치라'고 말했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의 현장에서도 약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여성혐오 범죄와 그에 대한 무심한 반응들, 22만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과 40만 명이 참여한 유사 텔레그램 채널들, 인셀 테러와 인셀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과 무엇이 다른가. 집회 시작 전에 다 같이 그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왜 응원봉을 든 여성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면서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야유를 보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집회에 나간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그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의 비상식적인 혐오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여자도 인간이라는 급진적인 표현이다.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노동자를, 장애인을, 빈민을, 지방민을, 이주민을 인간으로 보겠는가. 지난 7일 여당의 전원 퇴장은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준 국민 역시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그래도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도모했던 무력 진압이 아니라 비폭력 시위로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한 번도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1987년 6월 전국에서, 2016년 12월 광화문에서, 그리고 2024년 12월 국회에서 우리는 웃으며 맞서 싸우고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도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국가가 결혼 후 퇴직을 묵과해도, 평생 남성에게 종속된 호적을 갖게 만들어도, 성매매를 수출주도 산업으로 간주해도, 성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해도 좌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가서 싸웠고, 이겼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쳤다.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국가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여성과 소수자가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군인이 민간인을 사살하기 시작하면 국가에 의해 병역을 금지당한 여성이 매우 위태로워진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성은, 페미니스트는 윤석열을 탄핵하러 국회로 나왔다. 집회에서도 여성혐오가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온 것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하나하나가 사람됨을 아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차별은 패배하고 평등은 승리할 것이다. 더 이상 윤석열 같은 내란수괴와 국민의 힘 같은 내란공범이 탄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들에게 표를 주는 여성혐오자들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 페미니스트는 국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 윤민석,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中 -

2024. 12. 12.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연계전공 졸업생
유 하 영

윤석열을 탄핵한 12월 14일, 싱어송라이터 이랑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라는 피켓을 든 페미당당 활동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올해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도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였다. 총칼을 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을 향해 청년 여성들은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맞섰다. 집회마다 퀴어와 페미니스트의 발언이 있었고, "다시 만난 세계"는 새로운 민중가요로 등극했다. 사랑하는 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2030 여성들은 감정과 실천이 정치적 구호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감정과 실천이 정치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 이론도 있다. 베임은 여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감정적 지지와 상호 돌봄을 핵심으로 조직된다고 설명했다.[62] 탄핵광장에서는 이러한 돌봄의 정치학이 저항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만들어 줄게'라는 구호는 투쟁보다는 보살핌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는 러딕이 말했듯, 돌봄이 단순한 사적 영역의 활동이 아니라 보존, 성장,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실천임을 보여준다.[63]

누가 여성의 목소리를 두려워 하는가

여성 의제는 사적이고 감정적이라며 정치에서 뒷전이 되기 일쑤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은 철저히 외면한다. 정치의 언어는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주의적인 발화는 통제와 경계를 뚫기 힘들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두려운 이유는 '가장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할 수 없다. 가부장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광장을 빛낸 여성들이 정치적 세력을 키우면 가부장제와 공모하던 자본주의, 군사주의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여성 폭력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도록 만드는 근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6월 25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주관 수요시위에서 내가 했던 발언의 일부를 발췌한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이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 성착취의 상징이었고, 미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도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삶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오래된 폭력의 새 얼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생존자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국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외침은 고통의 기록이자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건네는 용기의 불꽃이었습니다.
전시에 여성을 도구로 만든 국가가 평시에 여성을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기지촌 성매매, 그리고 오늘날 청년 여성이 겪는 디지털 성폭력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여성은 언제나 위험하고 불온한 존재로 낙인찍힌다. 여성의 말하기는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를 뒤흔들고 남성중심적인 질서를 비틀기 때문이다. 스피박이 밝혔듯, 소외된 집단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64] 일본군성노예제였던 할머니들,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던 언니들, 그리고 광장을 채운 여성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말해왔고, 말하고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다. 나의 몸은 나의 선택이고, 너의 몸은 전장이다(My Body, My Choice / Your Body is a Battleground). 이 상반된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간파하고 폭로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억압받는 이들 자신이다.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목소리다. 그래서 여성들의 말하기는 단지 피해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를 동시에 흔드는 정치적 서사일 수밖에 없다.
광장 시민들은 윤석열 즉각퇴진뿐만 아니라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담고 있다. 한창 화제가 되었던 부산 서면 집회의 '노래방 도우미'의 발언 역시 윤석열 탄핵에만 만족하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외침이었다.

---

62) Baym, N. K. (2015). *Personal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John Wiley & Sons.
63) Ruddick, S. (1995). *Maternal thinking: Towards a politics of peace*. Boston: Beacon.
64) Spivak, G. C. (2023). Can the subaltern speak?. In *Imperialism* (pp. 171-219). Routledge.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약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기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서는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금지법이,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광장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65]를 연구하고 두레방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며,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K-pop의 뿌리는 미8군사단 클럽이다.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에서 위문공연을 하던 한국인들은 오늘날 빌보드를 장악하는 한류스타가 되었다. 한편으로 한류는 자력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상징이자 제국주의 문화의 전유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기지촌은 여전히 성착취와 식민주의가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이다. 미국의 팝 문화를 성공적으로 모방한 한국은 이제 경제패권을 이용해 필리핀 여성을 착취한다.[66] 기지촌에는 피해와 가해가 순환하며 반복되고 있다. ‘진짜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청년 여성들은 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나는 1월 17일 ‘윤석열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대행진’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을 끝맺었다.

“우리는 ‘딴따라’와 ‘빠순이’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호명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여성이 교제폭력과 불법촬영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세상, 성소수자도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세상,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랍니다.
소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어른이 되어 여성혐오 헤게모니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과 낡은 질서를 끝장내러 광장의 주체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국민의 힘을 해산시킨 뒤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그들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박살 내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회대개혁이란 소외된 집단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것이다. 시민들이 열었던 광장은 말한 이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 ‘다시 만날 세계’였다. 광장이 닫힌 이후에도 일상과 정치에서 광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은 이루어졌지만, ‘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고해 보이는 구조를 무너뜨리는 힘은 연약해 보이는 개인의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정치가 여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한다면 여성들은 더 크게 외칠 것이다. 더 많은 여성의 발언과 더 많은 시민의 경청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틀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청년 여성들은 다시 광장에 모일 각오가 되어있다.

여성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

65) 셰이퍼가 제시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단순히 특정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들의 집합을 넘어,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와 권력관계의 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그는 사운드스케이프를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듣거나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의 총체”로 정의하면서, 특히 소리가 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공간을 점유하는 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Schafer, 1993/1977).

66) Kim, K. H. (2021). *Hegemonic mimicry: Korean popular culture of the twenty-first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올해는 한반도 분단 80주년이다. 광복 이후 미군정과 냉전 질서에서 시작해 오늘날까지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사드 배치 논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기지촌은 미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암시한다. 태극기집회에서도 성조기가 당연하게 등장하곤 한다. 아직도 반공과 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고, 국가 폭력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수자의 인권 보장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방해한다고 인식된다. '종북 게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성애 중심의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힌다. 페미니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 국가는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이라고 부르며 기지촌 정화운동을 실시했다.[67] 여성의 몸은 가부장제와 군사주의가 공모해 만든 장악한 식민지였다. 민족주의 운동에서도 여성은 미제국주의에 의한 피해자로서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진영을 막론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시도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막았다. 여성 없는 평화는 폐허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이다.

군사주의는 여성의 삶을 보이지 않는 전투지대로 만든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책에서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한다. "딸아이를 낳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우리 모녀를 보더니… 잠깐 있다 가버렸어. '정상인 여자라면 과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 총쏘기를 배우고? 그래서 당신이 정상아를 낳을 수 없는 거다'라고 나를 비난하며 가버렸지."[68] 이 발언은 싸우러 나간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정상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은 국가를 위해 싸워우더라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전쟁은 여성에게 이중의 침묵을 요구한다. 국가가 원하는 여성의 역할은 총을 드는 게 아니라 병사를 재생산하는 존재일 뿐이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의 삶은 고요하지 않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여성의 몸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인셀[69] 테러, 여성을 향한 '묻지마 살인',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새로운 전선이 되었다.

적뿐만 아니라 아군과도 싸워야 하는 여성의 현실은 기존의 평화 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존의 평화 담론은 전쟁 또는 분쟁 종식이나 무력 충돌 중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자동으로 여성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후 여성은 남성중심적인 경제 회복의 그늘 아래에서 아이를 많이 낳거나 전업주부로 복귀하도록 강요당했다. 여성을 향해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태도는 여성이 겪은 전시 성폭력과 고통을 덮는다. 여성을 중심에 둔 평화 담론은 이러한 침묵을 깨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에서의 폭력과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실천은 말하기에서 시작한다. 인셀 테러, 디지털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통제는 모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착취이다. 전쟁 중단을 넘어 차별과 배제 없는 일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여성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성주의 평화는 구조를 전복하는 말하기에서 시작된다. 고통을 정치로 전환하는 이 급진적인 실천은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들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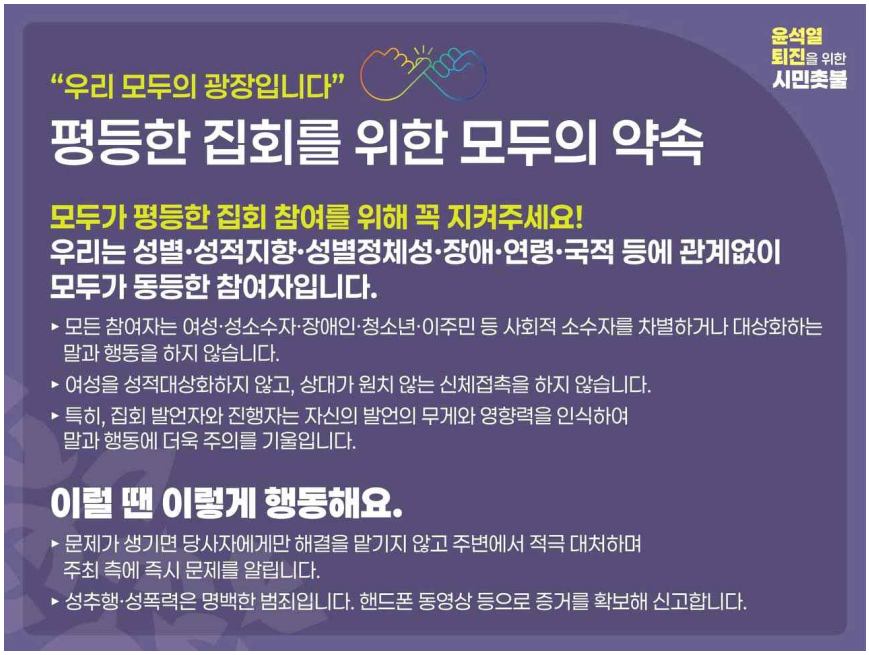
탄핵광장은 이러한 평화가 실현된 범시민들의 공간이었다.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광장 밖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혐오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래서 비상행동은 '평등수칙'을 배포하고 집회를 시작하며 수칙을 낭독했다. 또한 시민발언 신청을 받으며 평등수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 발언자 가이드라인을 숙지시키기도 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동물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광장의 평화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안전하게 말하고, 서로의 다름을 견디는 공간을 조율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성을 주체로 두는 평화 담론은 제도를 넘어 일상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

67) Moon, K. H.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68)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2015).『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69) '인셀(incel)'은 1990년대 중반 젊은 캐나다 여성 알라나(Alana)가 만든 소규모 연애 추진 사이트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비자발적 순결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준말로, 오늘날 '연애 또는 성적 파트너를 원하지만 구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정의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웹사이트, 블로그, 포럼, 팟캐스트, 유튜브, 채팅방 등의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들은 2014년 엘리엇 로저 총격사건 이후 폭력적인 여성혐오로 악명이 높아졌으며, 그 자체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로라 베이츠, 2023).



<비상행동이 배포한 집회 평등수칙>

평화는 군복을 입은 남성들만의 테이블 위에서 결정되어왔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 평화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성폭력 생존자의 고백, 기지촌 여성의 증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외침은 새로운 정치의 언어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구조의 폐해를 고발하는 용기이다. 광장에서 나는 '다시 만날 세계'를 목격했다. 그것은 추상적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매일 이어 붙이는 평화였다. 광장에서 종종 불렸던 문정현 신부와 조약골이 만든 노래 "평화가 무엇이냐"는 평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평화는 매일의 실천 속에 담겨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므로, 페미니즘은 여성을 침묵하게 만드는 대의를 거부한다. 군대는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었으나, 2030 여성들은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신나게 노래 불렀다. 평화는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광장을 누빌 때 지속된다. 말하고, 머무르고, 춤출 수 있는 자유야말로 평화의 본질이다. 광장에서 발언하는 여성들에게 '페미가 나댄다'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러한 태도가 광장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동을 걸었다.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만이 '진짜 민주주의'이듯, 사각지대 없는 평화만이 '진짜 평화'이다.

탄핵광장이 늘 평온했던 것만은 아니다. TERF(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퀴어와 이주민을 배척하기도 했고, 정당끼리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광장이 닫힐 때까지 김건희를 여성혐오적인 표현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광장은 확실히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신뢰에 가깝다. 청년 여성에게 평화는 익명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용기이자 말한 뒤 돌아갈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신뢰다. 8년 전 마스크를 쓰고 발언하던 이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2030 여성들의 표정에서 나

는 새로운 평화의 윤곽을 보았다. 이들은 두려움이 아닌 환대로 구성된 정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청년들 사이에서 페미니스트는 기괴하고 이상한 여자라고 인식된다. 여자도 군대 가는 게 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 2030 남성들이 수두룩했다. 파면 이후 민주당이 주관한 청년 정책발표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발표한 적이 있다. 내 직전에 발표를 맡은 20대 남성분이 가져온 정책은 군대 문제였다. 플로어 토론에서 성범죄와 군대 문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젠더 갈등처럼 분석하시는 분도 있었다.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했는데, 왜 민주주의는 페미니스트를 구하지 않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탄핵광장의 2030 여성들이 지워지지 않을지 끝도 없이 고민했다. 내가 찾은 해답은 말하기이다. 한 번 말해서 듣지 않는다면 열 번 말하고, 열 번 말해도 안 된다면 스무 번 말하기로 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게 광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지워진 여성들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중세 마녀사냥에 도달한다. 페데리치는 마녀사냥이 단순히 종교적 광기나 여성혐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는 근대 국가가 여성의 노동력을 탈취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공동체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70] 마녀를 죽인 뒤 국가와 자본, 그리고 남성은 생산수단을 장악했다. 반대로 말하면 마녀는 공동체를 이끌며 지식을 나누고 치유와 연대를 가능하게 한 이들이었다. 그렇게 여성을 지우려고 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여성들이 있었다. 100년 전 서프러제트가 그랬고, 지금 함께하는 페미니스트 동료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광장을 잇는 여성들이 그러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페미니즘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슬로건으로 글을 맺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참고문헌

로라 베이츠. (2023).『인셀 테러』. 위즈덤하우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2015).『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Baym, N. K. (2015). *Personal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John Wiley & Sons.

Federici, S. (2004). *Caliban and the Witch*. Autonomedia.

Kim, K. H. (2021). *Hegemonic mimicry: Korean popular culture of the twenty-first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Ruddick, S. (1995). *Maternal thinking: Towards a politics of peace*. Boston: Beacon.

Schafer, R. M. (1993/1977).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Simon and Schuster.

Spivak, G. C. (2023). Can the subaltern speak?. In *Imperialism* (pp. 171-219). Routledge.

70) Federici, S. (2004). *Caliban and the Witch*. Autonomedia.

끝나지 않은 식민지·전쟁 범죄와 포스트식민의 과제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성과 한반도평화 국회토론회
2025년 8월 13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포스트식민(Postcolonial)? 포스트식민주의 (Postcolonialism)?

- Post의 의미를 후기, 이후로 본다면, Postcolonial은 식민지 시기 이후의 어떤 것(Mishra and Hodge, 1994: 276), 혹은 독립이라는 역사적 시기 은유?
  →식민주의의 연속성과 변형 은폐.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체제,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신제국주의적 헤게모니 확산 은폐?

-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나 '제3세계'에서 서구로 이동한(relocated) 유색인종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탈위치(dislocation)와 재배치(replacement)의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경향? 문화이론 중 하나? (Ong, 1999)
  →개인적 경험? 연대와 집단저항의 경험? 정치경제적 구조의 측면? 식민지 지배자와 무관? 탈식민 저항의 역사 은폐?

✓결국 colonialism을 어떻게 보느냐 & Post(이후, 극복?)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연결

식민화(Colonization) & 식민주의(Colonialism)

식민화
- 일반적으로 타국(타민족, 타인종) 영토에 대한 정복, 실질적인 점유와 지배
- 지배적인 재현구조를 통해 피지배/개인 혹은 집단을 비인간화하거나 폄훼하는 이미지나 정신구조를 재생산(Heung, 1995: 83)

식민주의

1)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방식

2) 비가시적이고 은밀한 방식(문화적, 심리적)

→ 두 가지가 맞물려 지배자/피지배자 양쪽에 작동, 확대,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 식민화 정당화, 식민지 역사 찬양/은폐/왜곡

식민지 지배자의 권리

직접 통치와 지배(억압과 착취) & "누구를 재현하거나 대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력"(Said, 1979)

포스트식민(Postcolonial)!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자들의 주장

Edward Said, Homi Bhabha, Gayatri C. Spivak, Arif Dirlik, Rosemary Henessy...

- 포스트식민주의는 공식적 식민지 종식 이후 권력관계의 재편, 식민주의 잔재의 지속적인 영향과 변형, 그 결과를 동시에 은유하는 개념
-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조건이자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지구적 조건 및 그 결과인 인식론적 & 심리적 경향

➢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영향**

오늘날 **"**식민주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의 외피를 입었을 뿐**"(Hennessy, 2000: 159).**

그러므로 탈식민화(Decolonization)는

-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국과 피식민지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주목 (예: 식민주의적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 구조 및 실태 등)
- 공식적 식민지 종식 이후에도 힘의 논리에서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국가 간, 주체간 불평등한 힘의 역학관계, 이에 내재한 식민주의와 식민성 (coloniality) 성찰 및 극복
- 구조의 근본적 변화 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의식과 무의식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추구,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몸에 각인된 식민지 역사의 침전물, 이로 인해 유발되는 행위 모두 탈식민화
- 냉전분단 체제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경계들)에서 역사와 사회, 경제, 개인의 삶 사고와 변화를 위한 실천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탈식민화 기획(Postcolonial Feminist Projects of Decolonization)

-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서구(백인)중심주의 및 인종주의, 남성중심주의, 신자유주의 비판과 극복
  -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젠더와 맺는 관계(젠더 간 다른 효과),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교차성, 민족주의와 젠더,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 등 비판적 사유
  - 성별화된 식민지 주체/대상, 제도에 문제제기, 지배자의 역사에 도전, 식민지 이데올로기가 젠더에 근거해 (재)생산되는 방식(효과) 분석, 유일 저항담론으로 작동하는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비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 기록, 저항과 변혁의 역사 기록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자본주의, 반가부장주의, 반백인중심주의(반인종차별)의 급진적 기획

➢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비판과 그것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고찰(전쟁, 분단, 냉전체제, 군사주의), 여성들의 용기 계승

➢ 변화를 위한 실천과 초국적 여성연대

김학순의 식민지·전쟁 범죄 고발, 그리고 그가 던진 탈식민의 과제

1991년 8월 14일, 한국 공개 기자회견

"일본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일본 정부가 부인하는 걸]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었소.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 나이가 70이 다 되었소. 이만큼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올 때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야 말거야. 언제든지 하고야 말거야..."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공개 기자회견 당시 증언 내용 중)

1991년 12월 7일, 오사카 집회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와 일본의전쟁책임)에서 최초로 일본 공개 증언 (자료 기증: 김혜원, 소장처: 정의기억연대)

"일본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안소든 뭐든 개 마냥 사람을 끌고 다니고** 세상에…나도 여자인데 여자다운 행동을 한 번도 못해보고, 평생 동안 오지게 이런 날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슴에 맺힌 한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정말로 가슴 아파요.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가슴에 품은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풀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없어요. 앞으로는 전쟁도 하지 말고**...

내가 이제 한 번 나오니까, 그때는 아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덜한가 어쩐가, 실은 아직도 부끄럽다고 생각해선 안 돼요. 나라가 없는 @@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당했는데, 나는 희생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해선 안 되죠. 예. 할 말은 당연히 해야죠. 왜 부끄러워. 난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내 이 증언은 꼭 하고 싶어요. 좋아질 때까지,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겠어요."(1991년 12월 9일, 도쿄 한국 YMCA 강당에서 진행된 김학순 증언의 일부)

199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 50년을 맞아 일본 내 시민사회 자성의 분위기 고조, 김학순은 오사카, 도쿄 등을 돌며 증언집회를 이어감.

나는 군대, 싸우는, 군인만 쳐다봐도 떨리는데, 그리고 일본 깃발만 봐도, 지금까지도 치가 떨려요. 이번에 오면서도 얼마나 내가, JAL이라는 뭐 비행기를 탔는데, 뭣모르고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타고 오긴 하는데, 재판 때문에 오기는 해도, **비행기를 딱 타니까 날개 죽지 옆에가 봤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빨간 게, 히노마루(일장기)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내가 왜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나, 나하고, 나한테 @@@한 일본이, 나한테 @@이 일본인데, **내가 이 비행기를 왜 타고 가야하는지, 너무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잠도 내가 못잤어**...

일본 정부는 늘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하지만 말고 했던 일은 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한은 그렇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과 일본 정부에 전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단순히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정말로 일본 정부에 전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을 것**.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먼저 있던 @@ 생각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역사가 가르쳐줘야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청년이나 일본 청년들이 그거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김학순의 식민지·전쟁 범죄 고발, 그리고 그가 던진 탈식민의 과제

- 가해국/식민국가의 가해 사실 부정과 지속되는 부정의에 분노
- 식민지배자의 권리에 정면 도전
- 젠더화된 식민주의 범죄와 전시 성폭력 폭로, 여성의 삶에 미친 식민지의 문제 응시
- 지속되는 식민성에 문제제기
-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침묵당한 피식민자에서 '당당한' 희생자/'말하는' 피해자/탈식민을 위한 증언자 혹은 탈식민 운동의 추동자로 위치시킴

요구사항

1) 피해자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가해국(가해자)에 문제제기, 가해국의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요구
2) 부정의 역사 청산과 올바른 역사교육
3) 반전·평화를 위한 실천

➢ 공감의 연대, 기억의 연대로 확장, 탈식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으로 확장, 초국적 여성연대로 확장

그러나 극복되지 못한 식민주의와 식민성(coloniality)

-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전쟁 범죄 불인정
-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고 범죄를 봉합한 샌프란시스코협정과 한일협정의 문제, 그 영향력 지속
- 식민지·전쟁 범죄 진상 규명 미비
- 가해자(가해국)의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2차 가해)
- 한반도 식민지·분단냉전 체제 지속,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 지속
- 구조적으로 제국주의적-인종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 지속

이로 인해 발생한/하고 있는 문제들

- 역사부정세력 확장, 역사부정 확산: 식민지 극우의 주류화, 주류의 극우화 강화, 유튜브, SNS를 통한 조직적 공세 확산, 한미일 연대 구축
- 지속되는 피해자의 고통과 배제
- 총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역사정의
- 기존 과거사 관련 기구들의 분절적 접근과 파편화된 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 정권별 다른 접근, 피해자 중심 접근이나 인권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접근으로 새로운 문제 발생(덧난 문제들과 2차, 3차 피해)
- 산적한 미해결 과제

구체적인 문제들

- 탈식민과 정의를 위한 시민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 외면,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외교적 '합의들': 2015 한일합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의 승소판결 무시
- 역사적 사실 부정, 수요시위 방해와 피해자 모욕 방치
- 연구자들의 역사부정과 [교묘한] 왜곡 확산, SNS 등을 통한 10~20대 부정론 확산→ 극우화 경향에 일조
- 해외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체계적, 조직적 철거 및 설치 방해
-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혐오범죄, 교육권 침해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조선인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조선인 BC급 전범 문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 조세이(장생) 탄광 유골 발굴,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 간토 대학살 등 민간인학살(제노사이드), 군함도 및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후 역사부정,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방해, 군인·군속 및 노무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도쿄 & 오사카 대공습의 조선인 희생자 문제,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및 추모) 문제 등

큰 틀에서 제언

- **광복 80주년을 식민주의(을사늑약 이후 120년) 청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 식민지·전쟁 범죄 피해자 고령화에 따른 **'포스트 피해생존자 시대'** 대비해야
- 한국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올바른 기억 계승을 위한 노력 필요(자료 수집, 기록, 교육, 연구, 문화적 확산 장기적으로 고민)**
- **'한국형' 극우·내란 세력 형성과 확장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조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며, 궁극적으로 **그 조건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함
- **독립적이고 일관된 '역사 정책' 추진**
- **탈식민주의, 반전·평화, 인권과 정의**를 기조로 미래지향적으로 **아시아평화인권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
- **식민지·분단냉전 체제 해소**, 약탈적 자본주의에 기인한 양극화 해소, 탈핵 & 비핵화로 나아가야 함

몇가지 구체적인 제언(예시)

1) 진상규명

- 한국 정부 차원의 **중단없는 '과거사' 진상 규명(공약 사항)**

2) 체계적 교육, 연구, 아카이브, 전시

- **탈식민지역사박물관'**(가), 혹은 공약 사항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아시아(여성)평화인권센터로 그 역할과 의미 확장 신설**
- ·한일과거사 관련 체계적 **교육: 국가 정체성 확립 및 독립운동 교육 강화: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 강화, 사관학교, 경찰대학, 공무원 연수 등 역사교육 필수 및 커리큘럼 개혁 등**
- **기존의 민간박물관(역사관) 지원 및 협력, 관련 연구자 양성 및 지원, 국내외인권네트워크 지원, 역사문화컨텐츠 체계적 지원, 전시성폭력 대응 및 국제인권단체 지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재설치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우익을 상대화할 방안 마련과 실천
- **(글로벌) 민관학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부상 및 연대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대응**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 실행·전달 체계: **새로운 기구** 설립

- 역사문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신설**(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 정책 총괄, 부처간 조정 및 협력, 실질적 권고. 실행 가능한 **민관학협의체로 구성(특히 미해결 식민지·전쟁 범죄 집중)**

4) 법 제·개정, 매뉴얼 등

- 「역사 정의 기본법」(가) 제정
- 외국 정부(일본, 중국 등)에 대응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구성(외교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 장기적으로 「역사부정 방지법」(가) 등 논의, 제정 필요

김학순'들'은 **30**여년 전부터 포스트식민 페미니스트 연대를 구축해 세계적으로 확장해 왔음. 이를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질의 & 응답

<토론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과제와 제언**

6.15여성본부 조직전환의 의미와 여성 평화·통일운동의 과제

이은정(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1. 서론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체제 아래 불안정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쟁 위기의 상시화, 남북관계의 경색, 군비 확장 경쟁은 평화와 공존의 비전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은 더 이상 군사·안보 엘리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상의 삶을 지키는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분단과 전쟁, 군사화의 피해를 가장 깊숙이 체험해온 여성들의 시각은 평화·통일 담론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여성본부의 조직 전환 과정을 통해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여성 평화·통일운동의 의미를 환기하며, 여성들이 꾸준히 실천해온 평화·통일활동을 공유하고자 한다.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6.15남측위 여성본부 조직 전환, 그 실질적 의미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2000년대의 남북 화해·협력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신냉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는 미국 주도의 대북 군사 압박이 집중되는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고 있다.
2024년 초 북측은 통일 관련 기구들을 정리하고, 남북관계를 '두 개 국가 관계'이자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6.15남측위 여성본부의 기존 활동을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민간 통일운동이 정치·군사적 적대 정책에 맞서는 범국민적 행동으로 확장되지 못한 한계는 뼈아프게 다가왔다. 남북 여성 교류 사업이 중단된 현재, 여성 평화·통일운동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로의 조직 전환은 이러한 반성과 고민의 결과물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의 의지를 담고 있다.

1) 국제적 연대로의 확장

기존에는 '민족 내부 문제'로서 남북 간 평화와 통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 시야를 더 넓혀 미국 주도의 신냉전 체제와 대북 군사 압박에 맞서는 국제적 반전평화 운동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근원을 국내의 대결적 상황에 더해 국제 정세와 맞물려 고민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2) 포괄적 연대 강화

여성만의 힘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젠더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사회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노동, 농민,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 함께 연대하여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3) 일상의 평화 운동 실천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 속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한다. 군사주의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평화를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닌 '오늘의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없이 통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직 전환을 통해, 우리는 경직된 정세 속에서도 여성 평화·통일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냉전 대결에 맞서는 새로운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3. 여성 평화·통일운동 활동 사례

▸ 경기여성DMZ평화걷기대회

2015년 *Women Cross DMZ(WCD)*의 정신을 계승한 이 걷기대회는 경기여성네트워크 소속 4개 단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참여 행사를 넘어, 여성의 목소리와 평화 행동을 공간 위에 새기는 실천이다. 군사화된 국경을 비폭력적으로 재전유하고,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로서 분단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적 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통일로드걷는여자

전국여성연대 소속 단체들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펼치는 대중적 평화·통일 활동이다. "착한 여자는 천당 가지만, 걷는 여자는 어디든 간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생활과 공동체 속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며 정기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여성의 일상적 불안과 위협이 분단, 군사주의, 젠더 불평등과 맞닿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통일로드걷는여자의 활동은 이제 단순한 걷기를 넘어, '여성의 시선으로 안전한 사회와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 경남여성연대의 평화통일기행, 여성농민통일선봉대 활동, 부산지역 현안대응등

접경지를 방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부울경 지역에서도, 경남여성연대는 임진각 등지로의 1박 2일 평화통일기행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철조망 너머 북녘 땅을 직접 마주하는 경험은 평화·통일의 의미를 실감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여성농민통일선봉대는 식량주권 수호, 토종 씨앗 지키기 등을 평화·통일 의제와 결합하여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지역은 부산여성행동을 결성하여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에서 부산여성행동 수요시위를 월1회 진행하고 있고, 지역현안인 세균무기실험실 폐쇄투쟁,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 지역통일선봉대 활동등에 함께 참여하면서 의제확장 및 다양한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성 평화·통일운동이 거시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및 제언 :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새로운 전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군사적 균형이나 남성 중심의 협상 구조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시각과 실천이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평화가 가능해진다. 이제 '여성 없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평화·통일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언한다.

1) 여성의 실질적 정책 참여 보장

성비 균형 제도화: 통일부, 국방부 등 평화·안보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해 정책 편향을 방지해야 한다.
여성단체 자문 및 참여 의무화: 평화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및 실행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공식 자문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평화 교육: 학교와 사회 교육과정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여 분단과 평화 문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야 한다.

2) 평화·통일 의제 확산 및 시민행동 강화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을 비판하는 반전 평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이를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논의로 연결시켜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통해 남북 교류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세계여성의 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여성 주체의 평화 캠페인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3)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의 일상화 및 대중화
지역 여성 모임과 동아리 중심의 평화걷기, 통일기행 등 생활 기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일상적 불안이 분단, 군사주의, 젠더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넓히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 = 평화로운 사회’라는 메시지를 확산해야 한다.

<토론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과제와 제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미군위안부 피해여성 특별법 재정의 의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노주현사무국장

1. 들어가며

먼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이 시작된 지 351일째입니다. 저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오랜기간에 걸쳐 왜 이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한미국은 세계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식민통치와 전쟁을 연달아 겪은 국가 중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된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댓가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초고도경쟁사회라는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문제점이라고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압축성장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짤막하게 드리자면 저의 큰삼촌은 국가유공자이신데 베트남참전군인이시며, 공군대령으로 재직하다 비행기추락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70년대 후반 산업역군으로 중동에서 일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태일열사가 나누어준 풀빵을 먹었던 미싱여공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자랑스럽게 공유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힘들었고 아프지만 우리는 국가가 인정한 국민의 공헌으로 여기며 이 일들을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정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국가 공동체란 개인과 그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공동체의 서사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공동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가 있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그려나갈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모였던 수많은 날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암묵적으로 그려나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프게도 국가공동체가 가진 서사 중 잊혀진 부분들과 재평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이를 복원하고 재평가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군위안부로 살아왔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기억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성들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으로 재편되기를 소망합니다.

2. 동두천옛성병관리소의 역사성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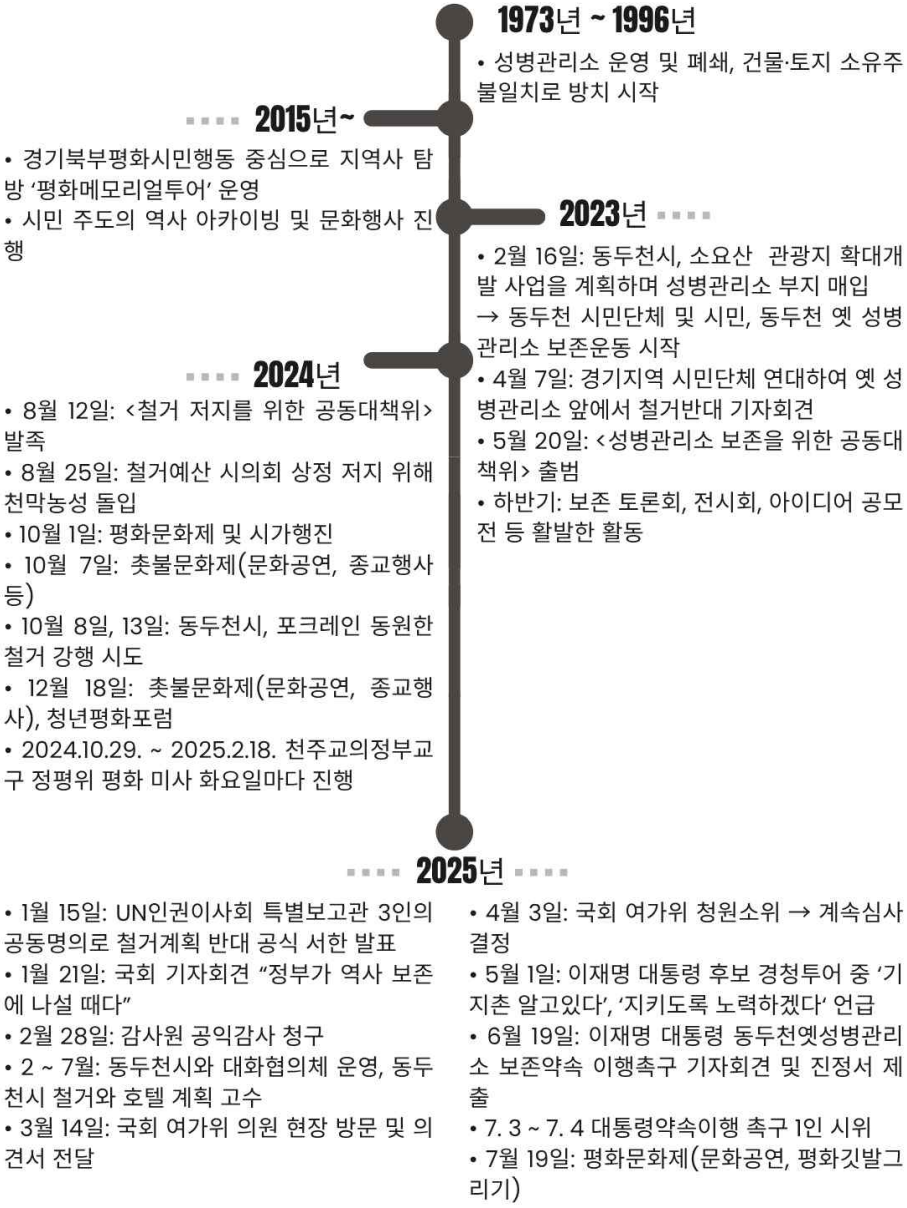
동두천이란 도시는 경기북부에서 위치해있으며 한때는 부산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던 대단한 도시의 위용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단했던 시절 국가는 미군위안부 여성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였고, 미군병사에게 깨끗한 몸을 제공해야 한다며 성병관리소를 세우고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였습니다. 197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이 건물은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수치스럽다입니다. 이 건물은 과거 동두천 기지촌의 미군위안부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고, 지역에 성병을 옮기기도 하였으며, 화려한 삶을 위해 기지촌에 왔었다. 혹은 ‘그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줄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녀들은 한국전쟁 이후 변변한 직업조차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향해 자신을 희생한

우리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다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였고, 미군위안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내 미군을 상대하여 달러는 버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고 배우며, 기꺼히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참전용사, 중동건설노동자, 미싱여공과 같은 동기로 대한민국의 전후복구와 산업화의 역군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은 여성을 앞세워 미군의 달러를 탈취했다는 가부장에 찌든 남성집단의 치졸한 면이 드러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조직적으로 여성의 몸을 구속하여 돈벌이를 하여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남성역사에 흠집을 주게 될까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3. 동두천옛성병관리소 보존운동 주요 연표



4. 세 가지 제언

첫 번째 제언은 동두천옛성병관리소 건물을 동두천평화박물관으로의 전환입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에 '동두천스토리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동두천의 현대사와 기지촌 문제

를 조망하는 가운데 미군위안부 문제를 접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동두천의 현대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평화박물관이 필요하며,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도 그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재 제언은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으므로 법률재정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법률재정은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법률재정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언은 대한민국정부의 공식사과입니다. 기지촌정화사업을 벌였던 각 부처는 이일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사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과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공동의 기억으로 재편되는 일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토론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과제와 제언**

미군 기지 주변 지역 내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에 대하여

두레방 박수미

두레방은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미군 전용 클럽'에 종사 하고 있던 (한국인) 기지촌 여성들을 시작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같은 현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목격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지촌 내 업주들은, 업종 형태를 법적 유형에 맞게 '외국인 유흥 시설'이라고 타이틀만 변경했을 뿐, 기존의 성착취적 시스템들을 작동하면서 미군들의 유흥을 위해 국외의 여성들을 입국시켜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주들과 업소에 여성들을 파견하는 역할로 또 다른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다수'의 업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다른 큰 장벽은, 여전히 미군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 기지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국 정부 내 대다수 정책 결정 권한자들과 이들의 논리에 현혹되어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은폐되고 있는 진실까지는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이 아닐까 싶다.

과거나 현재까지도, 기지촌 내 이주 여성들의 이슈는 인신매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심각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생계를 위해 성착취, 성매매를 감수하고 입국한 자발적인 대상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단정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고, 문제적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과 같다.

(기지촌 외에도 국내 다양한 성산업 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문제 역시, 우리 지역의 평화와 관련이 있고, 이 역시 큰 관심과 연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본 토론문에서는 발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기지촌 지역 내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 제언하도록 한다.)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적인 상황 및 착취 구조에 대하여

- 사업장 이탈: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여성들은 사업장을 도망나오기 위해 밖으로 문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주민이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신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도망나와야 하고", 그곳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즉각 이동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온 뒤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의논의 대상이 필요하며,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 사업장을 나온 뒤, 여성들의 공통적인 심경이었다. 여성들은 사업장을 나와서야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를 갖는다.

- 체류 자격 외 활동과 업무 강요: 단체의 도움 없이, 지인을 컨텍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장을 나오는 여성들이 사실 더 많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조를 요청할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피해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찰이나 수

사관 같은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들은 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료 여성들이 겪은 일이며, 지금도 그곳에서 견디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매매를 포함한 법을 위반한 잘못은 업주만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소에서 그렇게 세뇌받았고, 업주들은 법과 수사기관, 출입국을 능가할만한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주스 커미션 등의 성착취적 시스템과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분위기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각종 벌금 제도 역시 여성들의 사업장 이탈 사유가 되고 있다. 사실 매우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이다.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이탈 사유가 있는 피해 여성들을 만나기 전, 해당 연예인을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러 오는 프로모션(파견업자)쪽을 먼저 대면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애초부터 다른 일을 하러 입국한 여느 출입국 사범 중의 한명이라고 치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임금 착취 구조에 대하여

이주 여성들의 사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신매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파견업체들이 인신매매자들이라고 기소된 적은 단 한건도 없다. 위의 체류 자격 외 활동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업주가 처벌받았다. 피해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초청 업무를 파견업체(여성들은 '프로모션', '프로모터'라 부름)가 대행해줬기 때문에,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여성들은 현지에서 자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 훈련 및 입국 비용을 먼저 지불하여 사증을 발급해 준 프로모터가 자신들을 속여서 데리고 왔다고 판단하지 못한 채, 타국땅에서 입국 후 몇 달 치 월급을 포기하는 편을 택하게 된다.

이것 역시 미리 고지받지 못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확보해봤지만, 물적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파견업체에서는 초청 업무에 해당 되는 행정 업무로서 계약서에 연예인의 서명만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연 장소에서 실제로 여성들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실상에 대해 미리 여성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사 기관에 나와서는, 자신들도 알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본적, 결정적인 문제 상황에 대하여

과거나 현재에도 기지촌 내 이주 여성들이 유흥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연에 대해서는 외국인 연예인 파견이 제한되었던 공연법이 개정,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광 진흥법에 의거한) 미군 대상 클럽, 즉 '외국인 유흥 시설'에도 외국인 연예인들이 파견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주류 판매 등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미군 대상 유흥 시설인 '외국인 유흥 시설'들이 유흥 종사자들을 이주 여성들로 대체할수 있는 합법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에 처음 도착하여 뭔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과 이들의 구조 요청을 시작으로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게 된 두레방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E6 예술 흥행 비자에 대한 정책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이다.

*** 정책 과제 및 제언>**

- 일반 유흥 업소 내 유흥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문제 제기 참고 필요. 성적 착취 및 폭력 피해 가능성 염두 하여 '외국인 유흥 시설' 역시 외국인 연예인 배치 장소에서 제외되어야 함.
- 공연법 또는 관광 진흥법 재개정을 통해 외국인 연예인 제도 전면 검토 필요.
- 외국인 연예인들의 사업장 이탈 사유가 공연 아닌 손님 접대 역할 등 계약서상 또는 체류 자격 외 업무 강요였다고 한다면 법적 구제 필요. (과거 입국자들도 포함)
-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피해자 인권에 관심과 역량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 동의, 처벌이 확실해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와 처벌에 대한 확실성도 담보 필요.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

자, 여성, 아동 피해자 가능성 염두, 인권 및 여성 의식 있는 별도의 인신매매 담당 수사관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출 필요.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 권한 부여 필요.

- 이주민이라는 특수성 고려한 차별성 있는 충분한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현행 지원 시스템은 내국인 중심의 기준. 사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법적 체류 자격 보장(단, 취업 가능한 자격) 필요. 고소 및 소송 전제로 한 체류 자격 연장, 쉼터, 자활 지원 이용 기간 제한 등은 인종 차별 비판 우려.

<토론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과제와 제언**

오늘의 청년이 자주와 평화를 외치는 이유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조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보대학생넷 조직위원장 강새봄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8.15대학생 자주평화실천단, 즉 예전으로 치면 통일선봉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가량 저와 함께 숙식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실천단원은 약 250명 정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운동이라는게 요즘도 있냐, 다 망한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적기는 하지만 저희 실천단 중 절반 이상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의 청년학생들이 취업 경쟁에 목말라하는 요즘 시대에, 귀한 방학 일주일을 내어놓고 내란청산과 반트럼프를, 자주와 평화를 넘어 통일을 외치는 이들이 왜 존재하는지, 심지어는 왜 점점 늘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이 자주평화를 바라고 실천하는 이유는 이 활동이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패배적인 것들입니다. 청년 우울증, 고독, 취업 경쟁, 전세사기, 저출생…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소위 인서울 대학교 재학생이지만 주변에서 내 삶에 꿈과 희망이 넘치고 충분히 만족한다는 친구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평화 운동을 하는 청년들은 연대를 통해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듦으로써 세상을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역사 문제와 군사보호협정을 빌미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 청년학생들은 대학생 자주통일 실천단의 이름으로 전국을 누비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했고 시민들의 힘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중단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극우의 공세가 심화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시 대학생들은 우리가 단체별로, 학교별로 번갈아가며 수요시위를 주관하여 지켜나가자며 대학생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뭉쳤고 또 많은 분들의 연대로 오늘까지도 수요시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대학에서는 2주 만에 2만 명의 학생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환경 주권과 자주적 외교가 지켜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교내에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모여 실천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세상을 읽기 위해 분

투하다보니 넓은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7.27 민족 자주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극우 언론에서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좌파 단체들이 초를 친다고 비난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자주를 이야기하며 타임스퀘어의 전 차선을 행진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전세계 다양한 민족의 자주 활동가들을 모아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추진한 사람들이 한인 2세 청년활동가들이라는 것을 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주평화 운동을 하는 청년활동가들은 좁은 섬나라 같은 남한 내에 갇히지 않고 세계 곳곳의 정치, 운동 사례에서 참고하기도 하고 흐름을 보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희망과 힘을 믿기 때문에, 정권을 끌어 내린 이후에도 계엄을 가능케 했던 우리 사회의 분단 구조를 끝내자고 내란청산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자주평화 운동을 지속하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인간관계를 '모래알'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같이 있어도 잘게 흩어지는 모래 알갱이 같다는 뜻입니다. 모래알 같은 또래 인간관계에 허무함을 느껴왔지만 활동을 하며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평등과 존중의 인간관계를 절감했다는 회원들의 증언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늘 완벽해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모습에 따라 함께 변화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학생 운동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크게 겪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대학가와 청년들 사이에서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며 우리 운동 집단 내에서도 평등한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학내외 구성원들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들의 전말이 드러나며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이들이 행복한 자주 평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을 지금 바로 여기부터 실현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번의 전환은 윤석열 퇴진 광장이었습니다. 자주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뒷전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없는 곳은 자주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퇴진 광장을 거치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연대하게 되었고 실제 저희 단체 회원의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자주평화를 외치는 것이 우리 운동의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인성도 함양시키는 청년학생운동, 안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를 똑똑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키우는데에는 학생운동만한 것이 없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이전에 활동을 하셨던 선배님들도 청년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저마다 자기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분단 80년, 우리에게 광복은 찾아왔을까요?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세계에서 극우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학생 활동가들은 진정한 자주독립과 평화로운 일상을 향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다만, 새 세대가 미래를 향해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일례로 대학생 대부분이 사용하는 시간표 앱이자 학내 여론을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말만 커뮤니티이지 이 어플의 게시판은 내란세력 옹호, 여성과 사회적 약자 혐오 등 극우의 마인드를 확산하는 글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 그렇지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어플의 이용규칙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글은 올릴 수 없다'라는 규칙이 떡하니 적혀 있다는 점을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공동체 자주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설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정치권과 기성세대 선배님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과제와 제언**

UNSCR 1325와 한반도 여성평화 정책의 필요성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 들어가는 말

UNSCR1325는 2000년 10월 31일에 유엔안보리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로 채택된 것으로, 분쟁 예방· 관리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분쟁 및 성폭력의 예방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구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다. 더 나아가 안보리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후속 결의문(1820, 1888, 1889, 1960, 2106, 2122호)을 발표해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면 방지 및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한국의 경우 광복, 분단 80년이 되는 올해까지 아직도 정전체제 하의 불안한 상태에서 분단국으로서 분쟁 해결 및 평화정착을 추진하면서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 막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국, 공적개발원조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국가로서 해외파병지역과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교육· 건강 영역의 성별 격차를 측정한 「2025년 세계 성격차 보고(Global Gender Gap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은 101위로, 23년도의 94위에서 하락하였고, OECD38개 국가 중 순위가 100위권 밖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18.2%)와 경제(60.8%) 영역에서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임금격차(29.3%)와 여성 국회의원 비율(25.5%) 등의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두드러지는데, 평화· 통일 국방 영역에서의 남녀의 격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현재 이 영역에서 고위 정책결정자 중에 여성비율이 낮고[71], 성인지 예산[72]은 적으며,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분쟁과 군사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여성과 젠더

71) 2018년 10월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 숫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평화여성회가 각 기관에 발송한 정보공개 청구서 답변).

기 관 명	여성 숫자(총 인원)	비 율(%)
국가안보실	1(17)	6
통일부	1(26)	4
국방부	2(23)	8.7
외교부	14(280)	5

72)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2012.10)」, 11단위 : 개, 백만원, %). 2025년 현재 통계는 입수하지 못함.

기 관 명	2013 년도	비 중
전 부처 합계	275	총금액(12,913,670/100)
외교통상부	12	173,099(1.3)
통일부	3	21,845(0.17)
국방부	5	41,767(0.3)

문제(gender issue)를 다루어야 하며, 남북여성교류는 한반도의 성평등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성평화단체들이 이 길에 함께 매진해 주기를 희망하며 지난 528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 내용과 723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 면담 자료를 첨부한다.

2. 참고자료 1

정책협약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WCA연합회·정의기억연대·자주통일평화연대여성본부·전국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경기여성연대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WCA연합회·자주통일평화연대여성본부·전국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정의기억연대·경기여성연대는 한반도평화협력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협약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기반 확대, 남북여성 역량강화와 협력 지원, 국제사회 분쟁 하 여성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여성·평화· 안보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여성·평화·안보’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2. 외교안보평화 분야 고위공무원단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구성원이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3.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젠더분과 설치, 교류협력 각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남북여성교류협력과 민관거버넌스 담당부서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게 상호 협력한다.

4.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에 있어 여성 참여를 제도화하고 성주류화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경제협력을 위한 계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1325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 영역에 북한여성 개발협력, 남북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을 포함한다.

5.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효과적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시민사회 이행 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대통령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관련 비서관'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 5월 28일

더불어 민주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 단체연합	한국YWCA 연합회	정의기억 연대
선대위 한반도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	상임대표	상임대표	회 장	이사장
이용선	안김정애	김민문정	조은영	이나영

자주통일 평화연대 여성본부	전국여성 연대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경기여성 연대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상임대표	상임대표
이은정	양은미	우순덕	김은진

3. 참고자료 2

한국여성평화포럼

한반도 평화 정책에서의 여성의 참여 관련 요청 사항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자료
2025년 7월 23일

〈자료 순서〉

1. 한국여성평화포럼 소개

2. 민주당 대선 공약

3. 요구안
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산하에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2) 남북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경제협력을 위한 계정 신설
3)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 영역에 북한여성 개발 협력, 남북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명문화

1. 한국여성평화포럼 소개

오직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좋은 협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 - 코피 아난 -

한국여성평화포럼(이하 포럼)은 한반도 피식민지 경험과 남북 분할과 전쟁, 분단, 가부장제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성주의적 패러다임과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공감 위에 구성된 국내 58개 여성평화단체들의 '따로 또 같이'를 표방하고 있는 느슨한 연대체이다.

이 모임은 1990년대 초 남북 여성교류를 위해 이우정, 이이효재, 윤정옥 등 선배 평화활동가들의 판문점 왕래를 기원으로 하며, 6·15 선언 이후 연대를 중심으로 2000년대에 남북여성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포럼은 그동안 1) 남북여성 교류 및 북한 돕기 2) 베이징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활동 3) UNSCR 1325의 한국 내 실행, 즉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UNSCR 네트워크 운영과 국회와의 협업을 통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활동 4) 국방비 삭감 및 군축운동 5) 주한미군 등 전시 성노예문제 제기 6) 평화문화 배양을 위해 군사문화· 전쟁옹호론 배제, 갈등조정과 평화권,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평화교육과 갈등해결 교육 실시, 평화도시· 평화마을(공동체)· 평화일터· 평화학교 만들기 7)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 8)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범시민운동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특히 포럼은 여성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성평등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불가시화되어 있는 안보 분야, 즉 국방 외교 통일 관련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율 제고와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원칙으로 한 평화통일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통일부, 여가부 등의 한반도 평화정책에의 여성 참여를 위해 끊임없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 왔다. 비록 보수우익 정권들에 의해 한동안 남북여성 교류가 막혔지만 연대를 중심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에는 남북여성들이 개성에서 독자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집권 내내 북한 적대시 정책을 기조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시도로 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에 처했으나, 윤석열 탄핵의 빛의 광장에 섰던 여성들은 민주당 정부의 대선 공약, 즉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발 맞추어 다시 일어나 한반도 평화의 횃불을 들기를 원한다.

포럼은 지난 5월 28일, 민주당 21대 대선 선대위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한반도 평화협력위원회와 여성평화정책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붙임 자료 참조).

2000년 UNSCR1325 결의[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여성들은 평화· 안보 분

73) 연관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외교 통일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및 젠더 통합
2. 남북교류협력-정치 군사 사회문화 인도적 차원에서 여성 참여
3. 북한 및 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야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결정에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민주당 대선 공약

4. 외교· 안보 강국(외교· 통상)
0 북한 핵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 평화체제
0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분위기 조성
-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 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0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 교류협력 모색 추진

3. 요구안

가) 현황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교육· 건강 영역의 성별 격차를 측정한 「2025년 세계 성격차 보고(Global Gender Gap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은 101위로, 23년도의 94위에서 하락하였고, OECD38개 국가 중 순위가 100위권 밖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18.2%)와 경제(60.8%) 영역에서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임금격차(29.3%)와 여성 국회의원 비율(25.5%) 등의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두드러지는데, 평화· 통일 국방 영역에서의 남녀의 격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현재 이 영역에서 고위 정책결정자 중에 여성비율이 낮고[74], 성인지 예산[75]은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5.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의 인권 문제
6. 탈북여성의 인권문제
7.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하여 해외 파병활동의 역할과 임무, 여성의 참여
8. 해외파병군인 및 인도 지원 관련자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문제
9. 해외파병과 해외파병지역에 사는 여성의 인권
10. 재건 및 평화구축 지역에서 해외파병군인 및 인도지원 관련자의 활동
11. 공적개발원조와 수원국 지역의 여성의 권리 증징
12. 남북협력기금과 북한의 여성 개발
13. 한반도평화체제 형성과 평화군축 문제

74) 2018년 10월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 숫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평화여성회가 각 기관에 발송한 정보공개 청구

적으며,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분쟁과 군사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여성과 젠더 문제(gender issue)를 다루어야 하며, 남북여성교류는 한반도의 성평등한 평화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나) 요구안

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산하에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활동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사업 축소 상태이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를 위해 남북여성교류협력을 총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여성교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협력기금에 〈남북여성경제협력기금〉 계정 신설

2025년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 4438억으로 되어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민간교류 분야에 대한 지출은 전무한 상태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인 예산 배정 의무화가 필요하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남북여성경제협력기금 계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 영역에 북한여성 개발협 력,

서 답변).

기 관 명	여성 숫자(총 인원)	비 율(%)
국가안보실	1(17)	6
통일부	1(26)	4
국방부	2(23)	8.7
외교부	14(280)	5

75)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2012.10)」, 11단위 : 개, 백만원, %). 2025년 현재 통계는 입수하지 못함.

기 관 명	2013 년도	비 중
전 부처 합계	275	총금액(12,913,670/100)
외교통상부	12	173,099(1.3)
통일부	3	21,845(0.17)
국방부	5	41,767(0.3)

남북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명문화

현재 4기 국가행동계획이 실행 중이지만 북한여성 개발협력과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항목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5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